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 강 수 계 관 리 기 금
낙 동 강 수 계 관 리 기 금
금 강 수 계 관 리 기 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 고용노동부 소관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 1

Ⅱ. 심사경과 ····· 2

Ⅲ. 제안설명의 요지 ····· 3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 11

Ⅴ. 대체토론 요지 ····· 80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80

Ⅶ. 심사결과 ····· 84

Ⅷ. 소수의견 요지 ····· 84

Ⅸ. 특이사항 ····· 84

Ⅹ. 부대의견 ····· 85

《 별첨자료: 2026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 94

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 95

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 98

Ⅲ. 부대의견 ····· 134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한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11.1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상정·심사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11.1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상정·심사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11.17.)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상정·심사·의결(수정가결)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기후부 총지출은 기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 374억원과 기후부와 산업부가 이관 협의한 4조 909억원을 합한 19조 1,2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부 소관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총 3조 6,81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은
❶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❷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❸기후위기 시대 안전기반 확충,
❹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단가[전기승용 300만원]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원, 대당 100만원]을 신설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융자[737억원], 펀드[740억원], 보험[20억원] 등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수송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대상 탄소중립 설비투자[1,276억원]를 확대하고,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4,253억원], 펀드[592억원] 등으로 산업계의 탈탄소 산업 전환도 지속 지원합니다.

다회용기 보급[157억원], 탄소중립포인트[181억원]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햇빛연금 사업[49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난방전기화 사업[90억원]도 신설했습니다.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220억원]으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전환 시범사업도 본격 시작합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에 필요한 대용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설비 핵심기술 개발사업[120억원]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로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6,480억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매트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강화[861억원]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1,104억원] 설치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질없는 녹조대책 이행[2,037억원]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취·양수장 시설개선[380억원]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자연, 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갑니다.

하수관로 신설·분류식화[1조1,167억원] 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1조2,686억원]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편성권을 갖도록 개선합니다.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413억원]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100억원]을 편성하여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도 기후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소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재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원인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위법사항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 형태의 다변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 등 구조적인 도전과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산업안전의 취약성,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등 해묵은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총 예산안 규모는37조 6,157억원으로, 약 2조 2,70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AI 고급 훈련 과정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AI 훈련에 총 2,50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 특화훈련을 2배로 확대하고,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주 4.5일 지원 패키지를 324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행

복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중앙정부·민간·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샐 틈 없는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터지킴이 446억원, 신고포상금 111억원지방정부 협력 산재예방 143억원 등총 2,6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입니다.
노사단체 및 민간 노동센터 등과 협업하여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임금·직무 실태조사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 체불임금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감독관을 약 2천명 증원하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성장을 위한 포용적 고용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일하는 모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고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항들을 귀담아 듣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기상청 소관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6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16.8% 증액된 5천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빈발하는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상·기후 감시·예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상·기후 및 지진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 극한호우 등 위험기상과 지진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상·기후 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과 국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상분야 선도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았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검토 총괄표

구 분	검토사업	세부 검토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103	120
고용노동부	28	40
기 상 청	5	5
계	136	165

2. 기관별 검토보고 개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세입예산》		
1. 기타재산이자수입 (일반회계 54-546, 환경개선특별회계 54-546)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예치이자 등 보조사업 완료 이후 이자수입 등을 반납하는 세입으로, 소송불복 및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미수납이 지속되는 한편, 실제 수납액은 예산 대비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소송 종료 후에도 미수납된 소송판결금 이자와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 강화, 이자 산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미수납 관리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및 대행역무비 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권 p.51
2. 기타경상이전수입 (환경개선특별회계, 59-596)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882억 9,900만원 증액된 4,44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1권 p.56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의 수납실적, 미정산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td><td></td></tr>
<tr><td>3. 일반회계전입금(환경개선특별회계, 91-911)</td><td>▶2026년에도 자체세입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법정부담금 수납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세출사업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적절히 설정하여 안전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td><td>1권
p.61</td></tr>
<tr><td>4. 기금예수금(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4-943)</td><td>▶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재원 부족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이 4조 8,000억원까지 증가하여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자 부담 확대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예수금 추가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합계</th></tr>
<tr><td>443,986</td><td>1,159,400</td><td>1,707,093</td><td>1,500,000</td><td>4,810,479</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1권
p.63</td></tr>
<tr><td colspan="3">《총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td></tr>
<tr><td>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td><td>▶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1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은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에너지 분야를 통합하여 별도로 편성하였음.
정부제출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하여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관된 인력과 사무에 대한 인건비·기관 운영경비·사업비는 2026년 산업통상부 예산에서 감액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되, 일반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각각 변경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편성되는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282억 6,800만원 규모이고,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세부사업은 132개 사업 4조 909억 1,800만원 규모임.</td><td>1권
p.68</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5예산		2026 예산안 (B)	증감		비고
	본예산	2회 추경(A)		B-A	%	
계	13,956,371	13,968,120	19,128,268	5,160,148	36.9%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4,090,918백만원
· 일반회계	2,204,660	2,264,260	2,440,766	176,506	7.8%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46,941백만원
· 환경개선특별회계	4,899,451	5,185,556	4,074,881	△1,110,675	△2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00,667	2,775,417	4,491,552	1,716,135	61.8%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1,266,014백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96,694	2,687,988	4,437,636	1,749,648	65.1%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18,895백만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422	82,422	2,439	△79,983	△97.0%	
· 한강수계관리기금	487,187	487,187	452,560	△34,627	△7.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824	224,824	213,871	△10,953	△4.9%	
· 금강수계관리기금	122,266	122,266	116,715	△5,551	△4.5%	
· 영산강수계관리기금	90,134	90,134	90,883	749	0.8%	
· 석면피해구제기금	48,066	48,066	47,897	△169	△0.4%	
· 전력산업기반기금	-	-	2,575,256	2,575,256	순증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2,575,256백만원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183,812	183,812	순증	산업무→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183,812백만원

《총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검토》

6.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검토	▶2026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은 총 17개 부처에 347개 사업, 16.8조원 규모로 상위 3개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6조 8,266억원(62개 사업), 기획재정부 2조 5,581억원(132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조 9,181억원(5개 사	1권 p.77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업) 순으로 나타났음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수(개)				예산(억원) 세부사업	
	합계	정량	정성	R&D	'25년*	'26안**
합계	347	95	103	149	120,526	168,006
기재부(기금)	132	18	31	83	22,761	25,581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기금)	62	30	21	11	43,643	68,266
산업부(예산·기금)	26	-	11	15	22,367	19,034
교육부(예산)	1	1	-	-	2,886	2,003
국토부(예산·기금)	32	8	12	12	4,925	12,128
중기부(예산·기금)	5	2	3	-	9,615	19,181
해수부(예산·기금)	25	13	5	7	4,520	5,451
과기부(예산·기금)	8	1	1	6	130	491
농림부(예산·기금)	18	6	7	5	2,218	3,894
보훈부(예산)	1	-	1	-	99	93
국방부(예산)	1	1	-	-	35	2,671
외교부(예산)	1	-	1	-	-	27
기상청(예산)	1	-	-	1	327	348
산림청(예산)	22	13	8	1	5,011	6,261
농진청(예산)	9	-	1	8	833	1,208
경찰청(예산)	2	1	1	-	955	1,146
해경청(예산)	1	1	-	-	201	223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중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자율, 세종, 제주)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서 누락되었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사업계획서 등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정성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등 예산서 작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일정부분 이상 배출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서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송분야를 포함하여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기획조정실》

7.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R&D)(신규)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 사업은 현장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고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하여 기술개발로 즉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정책 실시간 소통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 비지정(품목 지정형)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고,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7억원이 편성되었음.	1권 p.109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다만, 신규 환경 R&D 사업이 현장 수요 대응과 시급한 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26년 초에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다른 부처 R&D 사업과 중복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과 연구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

[품목지정 및 사업공모 절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td></tr>
<tr><td>8.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환경)(신규)</td><td>▶‘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환경)’ 사업은 국내 환경기업의 AI 응용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과제들의 소요기간을 고려한 과제 선정 및 평가, 성과지표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환경) 과제 계획]
<table>
<tr><th>구분</th><th>1년 지원</th><th>2년 지원</th></tr>
<tr><td>지원과제</td><td>10개</td><td>5개</td></tr>
<tr><td>지원품목</td><td>· 1년 內 개발 가능
· 빠른 시장 침투 가능 품목</td><td>· 1년 이상 개발 필요
·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품목</td></tr>
<tr><td>산출내역</td><td>10개 과제 × 40억원 = 400억원</td><td>5개 과제 × 20억원 = 100억원</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1권
p.114</td></tr>
<tr><td colspan="3">[수자원정책관]</td></tr>
<tr><td>9.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일반회계, 5134-301)</td><td>▶내역사업인 ‘수문정보인프라 확충’사업(42,139백만원)의 ‘자동유량 설치’ 사업(13,398백만원)은 사업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개소당 설치</td><td>1권
p.12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단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8억원)할 필요</td><td></td></tr>
<tr><td></td><td>[자동유량 시설 설치유형에 따른 소요 예산 내역('25.10. 재산출)]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형식</th><th rowspan="2">표준 단가</th><th rowspan="2">'26년 설치 지점</th><th rowspan="2">'26년 소요 예산</th></tr>
<tr><th>토목공사</th><th>센서형태</th></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100m미만</td><td>199</td><td>4</td><td>796</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100m미만+관측국사</td><td>249</td><td>3</td><td>747</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100m~200m</td><td>263</td><td>13</td><td>3,419</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100m~200m+관측국사</td><td>313</td><td>10</td><td>3,130</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200m~300m</td><td>323</td><td>5</td><td>1,615</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200m~300m+관측국사</td><td>373</td><td>3</td><td>1,119</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300m이상</td><td>391</td><td>-</td><td>-</td></tr>
<tr><td>교량부착형</td><td>전자파표면유속계(1set)300m이상+관측국사</td><td>441</td><td>4</td><td>1,764</td></tr>
<tr><td colspan="3">총 계</td><td>42</td><td>12,590</td></tr>
</table></td><td></td></tr>
<tr><td></td><td>▶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자원조사기술원의 기관운영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등을 사업비와 구분 계상하여 동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td><td>1권
p.128</td></tr>
<tr><td>10. 국가하천정비
(일반회계,
5131-301)</td><td>▶'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504,340백만원)의 '신석지구 하천정비'사업(6,502백만원)은 사업물량 조기집행으로 '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변경되었으나 현재('25년 9월 말, 현재)까지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6년 예산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안을 조정(△38억원)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할 필요
[2026년 신석지구 정비사업 실시내역 및 잔여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전체</th><th>기시공</th><th>5차공사*</th><th>잔여사업</th></tr>
<tr><td colspan="2">총사업비</td><td>38,985</td><td>31,476</td><td>4,862</td><td>2,647</td></tr>
<tr><td colspan="2">Ⅰ. 시 설 비</td><td>29,598</td><td>23,417</td><td>4,284</td><td>1,897</td></tr>
<tr><td>1.</td><td>도 급 액</td><td>23,994</td><td>18,488</td><td>3,785</td><td>1,721</td></tr>
<tr><td>2.</td><td>관급자재비</td><td>4996</td><td>4,519</td><td>448</td><td>29</td></tr>
<tr><td>3.</td><td>기타부대비</td><td>608</td><td>410</td><td>51</td><td>147</td></tr>
<tr><td>-</td><td>폐기물처리비</td><td>608</td><td>410</td><td>51</td><td>147</td></tr>
<tr><td colspan="2">Ⅱ. 보 상 비</td><td>5,339</td><td>5,261</td><td>78</td><td>-</td></tr>
<tr><td colspan="2">Ⅲ. 시설부대경비</td><td>4,048</td><td>2,798</td><td>500</td><td>750</td></tr>
<tr><td>1.</td><td>설 계 비</td><td>749</td><td>749</td><td>-</td><td>-</td></tr>
<tr><td>2.</td><td>감 리 비</td><td>3199</td><td>1949</td><td>500</td><td>750</td></tr>
<tr><td>3.</td><td>부 대 비</td><td>100</td><td>100</td><td>-</td><td>-</td></tr>
</table>
* 5차공사 : 2025. 02. 06 ~ 2026. 01. 05(330일)</td><td>1권
p.134</td></tr>
<tr><td></td><td>▶'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504,340백만원)의 '문발지구 하천정비'사업(4,331백만원)은 사업 전 구간의 지뢰 탐지</td><td>1권
p.137</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및 제거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공사구간(공정)이 없는 점과 최근 3년간 공사비 등 편성·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1년~2024년, 문발지구 하천정비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00	-	-	100	80	80.0%	20	-
2022	2,376	20	△1,999	397	322	81.1%	75	-
2023	3,100	75	△3,100	75	-	-	-	75
2024	10,430	0	△9,904	526	340	64.6%	185	1

▶'국가하천정비'사업(747,651백만원) 시설부대비(1,552백만원)는 지침상 규정을 초과하여 편성되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

[2026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내역사업별) 시설부대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설부대비 편성안	편성근거	
		공사비 편성액	요율
▪ 국가하천정비	1,552	428,207	0.36
-국가하천정비(일반)	1,284	340,479	0.36
-배수영향구간	127	34,761	0.36
-승격하천정비	56	15,332	0.36
-목감천정비	80	34,950	0.23
-원주천정비	5	2,695	0.19

1권 p.14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 20~30억원 0.36%, 200~1,000억원 0.23%, 2,000~3,000억원 0.19%, 3,000~5,000억원 0.17%

[2020년~2024년 국가하천정비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등</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0</td><td>1,150</td><td>101</td><td>△248</td><td>967</td><td>36</td><td>-</td></tr>
<tr><td>2021</td><td>1,280</td><td>36</td><td>△6</td><td>1,128</td><td>179</td><td>3</td></tr>
<tr><td>2022</td><td>1,600</td><td>179</td><td>-</td><td>1,386</td><td>382</td><td>11</td></tr>
<tr><td>2023</td><td>1,498</td><td>382</td><td>-</td><td>1,510</td><td>358</td><td>11</td></tr>
<tr><td>2024</td><td>2,552</td><td>358</td><td>-</td><td>1,634</td><td>1,139</td><td>137</td></tr>
</table>
</td><td></td></tr>
<tr><td>11. 금호강 하천조성
(일반회계,
5331-307)</td><td>
▶‘금호강 하천조성’사업(151억원)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60억원)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내역[국비(50%) 121억원, △30억원]을 반영하여 ’26년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금호강 하천조성사업 총사업비 조정 내역(’25. 7)]

○ 총사업비 : (당초)45,000백만원 → (변경)39,009.3백만원(△5,990.7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증·감</th><th rowspan="2">비고</th></tr>
<tr><th>당초</th><th>변경</th></tr>
<tr><td colspan="2">합 계</td><td>45,000</td><td>39,009.3</td><td>△5,990.7</td><td></td></tr>
<tr><td rowspan="2">계획 및 설계</td><td>기본계획</td><td>400</td><td>400</td><td>0</td><td></td></tr>
<tr><td>기본 및 실시설계</td><td>1,148</td><td>1,148</td><td>0</td><td></td></tr>
<tr><td colspan="2">공사비</td><td>30,916.6</td><td>25,619.9</td><td>△5,296.7</td><td></td></tr>
<tr><td colspan="2">관급자재대</td><td>8,754</td><td>8,754</td><td>0</td><td></td></tr>
<tr><td colspan="2">감리비</td><td>2,600</td><td>1,906</td><td>△694</td><td></td></tr>
<tr><td colspan="2">부대비</td><td>100</td><td>100</td><td>0</td><td></td></tr>
<tr><td colspan="2">환경영향평가 외</td><td>1,081.4</td><td>1,081.4</td><td>0</td><td></td></tr>
</table>
[금호강 하천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현황(’ 25. 7)]
(단위: 억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23년</th><th rowspan="2">’24년</th><th rowspan="2">’25년</th><th colspan="2">’26년</th><th rowspan="2">증·감</th></tr>
<tr><th>당초</th><th>변경</th><th>당초</th><th>변경</th></tr>
<tr><td colspan="2">계</td><td>450</td><td>388</td><td>15.5</td><td>68.5</td><td>64</td><td>302</td><td>242</td><td>△60</td></tr>
<tr><td>국 비</td><td>50%</td><td>225</td><td>194</td><td>2</td><td>40</td><td>32</td><td>151</td><td>121</td><td>△ 30</td></tr>
<tr><td>지방비</td><td>50%</td><td>225</td><td>194</td><td>13.5</td><td>28.5</td><td>32</td><td>151</td><td>121</td><td>△ 30</td></tr>
</table>
</td><td>1권
p.148</td></tr>
<tr><td>12. 국가하천유지보수
(일반회계,
5331-308)</td><td>▶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동 사업의 예산(296,948백만원)이 총액계상예산으로 편성·관리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이 시설물 노후도, 홍수발생이력 등을 고려하</td><td>1권
p.154</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여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년도 이월액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편성(확정내시) 및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분할 교부 시 1차 교부액 비중을 줄이고, 교부 당시 집행 내역 및 향후 집행가능성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1권 p.158
13. 취양수시설 개선 (일반회계, 5331-311)	▶**'취양수시설 개선'**사업(380억원)은 202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지자체의 반대, 인·허가, 현장 민원 등의 사유로 2025년 현재까지 총 70개소 중 단 1개소만 완료된 바, 사업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신규공법을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절차] 공익처분 (기후부→지자체) ⇨ 설계비 지급 (수공→지자체) ⇨ 설계 (지자체) ⇨ 설계VE 및 공사비 지급 (수공→지자체) ⇨ 공사 (지자체) ⇨ 사업비 정산 (지자체·수공)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25.9. 기준)] 	1권 p.166
14.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일반회계, 5231-309)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109억 4200만원)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26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계획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303억원)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공사비 등 총 21억 4,500만원(국비)만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 바, 이를 감안하여 '26년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88억원)할 필요 [2026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실시 계획(서울시)]	1권 p.174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추진 내용</th><th>사업기간</th><th>세부집행계획 (총 38,882백만원)</th></tr>
<tr><td>· 토지보상</td><td>'26. 2.~'27. 5.</td><td>·(보상비) 20,382백만원
- 수도자재센터 4,476백만원
- 동작구청 북측 15,155백만원
- 사유지 751백만원</td></tr>
<tr><td>· 공사비 등</td><td>'26. 10.</td><td>·(공사비, 2차) 17,250백만원
- 준공금 17,250백만원
·(감리비) 1,250백만원
- 기성 및 준공금 1,250백만원</td></tr>
</table>
[2026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소요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2026년</th></tr>
<tr><th>당초예산안 (A)</th><th>집행계획 (B)</th><th>이월예상액 (C)</th><th>소요예산안 (B-C, D)</th><th>조정필요액 (D-A)</th></tr>
<tr><td>합계</td><td>43,768</td><td>38,882</td><td>30,300</td><td>8,582</td><td>△35,186</td></tr>
<tr><td>국비(25%)</td><td>10,942</td><td>9,720</td><td>7,575</td><td>2,145</td><td>△8,797</td></tr>
<tr><td>지방비(75%)</td><td>32,826</td><td>29,162</td><td>22,725</td><td>6,437</td><td>△26,389</td></tr>
</table>
</td><td></td></tr>
<tr><td colspan="3">[물환경정책관]</td></tr>
<tr><td>15.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td><td>▶내역사업인 '고농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사업'(53억 5,000만원)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하반기인 2026년 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10억원의 연내 집행 가능이 어려워 보임.
▶당초 편성된 총사업비 대비 토지매입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td><td>1권
p.181</td></tr>
<tr><td>16.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6)</td><td>▶내역사업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1,442억 6,900만원)은 실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
- 2024회계연도 기준 80.5^, 2025년 10월 기준 70.9%
▶또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법정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의무 대상 산단수 198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산단은 37개소(18.6%)에 불과하므로 설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td><td>1권
p.190</td></tr>
<tr><td>17.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02)</td><td>▶동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 '호소생태계 유지관리'(5억원), '4대강 보 모니터링'(27억원),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연구'(16억원)의 중복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td><td>1권
p.196</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호소생태계 유지관리’는 안동호 수은 기준 초과에 따른 어업피해 회복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연구결과 또는 기존 측정 자료와 연계하여 방안 수립 필요
- ‘4대강 보 모니터링’의 조사 항목과 수행 방식은 기존 보 모니터링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원화 등 조정 필요
-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연구’ 사업 수행시 기존에 수행한 하구 기수생태계 확대 실증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예산 중복·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td><td></td></tr>
<tr><td>1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06)</td><td>▶내역사업인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사업(68억 5,800만원) 중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특별조치 이행에 대해 국고 100%를 지원하고 있음.
- 녹조 등 조류 발생이 공공수역 수질·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특별조치 이행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 없이 국가가 전액을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을 일정 비율로 부과할 필요</td><td>1권
p.207</td></tr>
<tr><td>19. 하수관로정비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12)</td><td>▶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199억 4,700만원)은 실집행이 부진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조정 필요
- 2025년 10월 말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지하안전평가·재해영향평가·문화재 조사용역 등 본공사에 필요한 평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임.

[본공사에 필요한 절차 진행 현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수행 여부 (시행시기)</th></tr><tr><th>강남역</th><th>광화문</th></tr><tr><td>조달청 입찰</td><td>O(’24. 4.)</td><td>O(’24. 4.)</td></tr><tr><td>지하안전평가</td><td>X(’26. 1. 예정)</td><td>X(’26. 1. 예정)</td></tr><tr><td>재해영향성검토</td><td>O(’25. 5.)</td><td>O(’25. 7.)(소규모)</td></tr><tr><td>재해영향평가</td><td>X(’25. 12. 예정)</td><td>X(’25. 12. 예정)</td></tr><tr><td>소규모 환경영향평가</td><td>O(’25. 7.)</td><td>미해당</td></tr><tr><td>문화재</td><td>미해당</td><td>O(’25.9.)</td></tr></table></td><td>1권
p.21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조사용역(우선시공분)</td><td></td><td></td></tr>
<tr><td>문화재
조사용역(본공사)</td><td>X('25. 10.
계약예정)</td><td>X(계획수립 중)</td></tr>
</table>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td><td></td></tr>
<tr><td>20.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04)</td><td>▶동 사업(1조 713억 7,300만원)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집행률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 필요
- 실집행 부진한 상황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역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이 더욱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td><td>1권
p.219</td></tr>
<tr><td>21. 관리청별 주민지원(한강 수계관리기금, 1131-302)</td><td>▶내역사업인 '일반지원사업'(657억 4,600만원) 중 신규 시범사업으로 반영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은 기존 태양광 설치 사업의 설치 규모·지원액을 상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임.

[기존 사업과 햇빛연금 비교]
<table>
<tr><th>구분</th><th>기존</th><th>신규</th></tr>
<tr><td>사업명칭</td><td>소규모 태양광패널 설치사업</td><td>햇빛연금*</td></tr>
<tr><td>지원규모</td><td>- 최근 5년, 53개소 39억원 1,176kWh (개소당 0.7억원 22kWh)</td><td>- '26년 7개소 49억원, 3,263kWh (개소당 7억원, 466kwh)</td></tr>
<tr><td>수익금</td><td>- 운영비로 활용</td><td>- 지역주민 소득 창출</td></tr>
</table>
*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협의 및 부지 확보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대상지 선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 필요</td><td>1권
p.415</td></tr>
<tr><td colspan="3">[물이용정책관]</td></tr>
<tr><td>22.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일반회계, 5110-302)</td><td>▶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은 이행협약 체결 지연, 관세 면제 절차 지연 등 현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원국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원국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td><td>1권
p.225</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2025년 9월 말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수자원공사)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스마트 물관리 사업 ('21~'27)	729	729	729	729	112	841	790	-	-	93.9
필리핀 라오그강 AI 기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3~'25)	2,835	2,835	2,835	2,835	1,600	4,435	1,877	-	-	42.3
필리핀 아파리시 스마트 물관리 사업 ('22~'25)	792	792	792	792	140	932	235	-	-	25.2
방글라데시 다카시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스마트미터 구축 시범사업 ('22~'24)	-	-	-	-	903	903	113	-	-	12.5
합계	4,356	4,356	4,356	4,356	2,755	7,111	3,015	-	-	42.4

23. 지하수관리(일반회계, 5131-301)

▶내역사업인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사업위치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025년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시행주체(한국수자원공사)			
		2025년 예산	집행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A+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계		19,293	19,293	4,370	23,663	3,968	16.8
상세조사		2,000	2,000	506	2,506	1,999	79.8
설계	소계	1,400	1,400	-	1,400	437	31.2
	위도	350	350	-	350	245	70.0
	청산도	350	350	-	350	192	54.9
	광양옥룡	350	350	-	350	0	0
	보성벌교	350	350	-	350	0	0

1권 p.231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 rowspan="9">시공</td><td>소계</td><td>15,893</td><td>15,893</td><td>3,639</td><td>19,532</td><td>1,482</td><td>7.6</td></tr>
<tr><td>덕적도</td><td>422</td><td>422</td><td>566</td><td>988</td><td>0</td><td>0</td></tr>
<tr><td>욕지도</td><td>1,151</td><td>1,151</td><td>1,900</td><td>3,051</td><td>55</td><td>1.8</td></tr>
<tr><td>강릉연곡</td><td>2,940</td><td>2,940</td><td>187</td><td>3,127</td><td>65</td><td>2.1</td></tr>
<tr><td>영동상촌</td><td>2,940</td><td>2,940</td><td>2</td><td>2,942</td><td>0</td><td>0</td></tr>
<tr><td>창양남양</td><td>2,940</td><td>2,940</td><td>14</td><td>2,954</td><td>0</td><td>0</td></tr>
<tr><td>영덕영해</td><td>2,940</td><td>2,940</td><td>403</td><td>3,343</td><td>268</td><td>8.0</td></tr>
<tr><td>소안도</td><td>1,960</td><td>1,960</td><td>365</td><td>2,325</td><td>292</td><td>12.6</td></tr>
<tr><td>양평양동</td><td>600</td><td>600</td><td>202</td><td>802</td><td>802</td><td>100.0</td></tr>
</table>
</td><td></td></tr>
<tr><td></td><td>▶내역사업인 ‘4대강 지하수 조사·공급 사업’은 민원 수요 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적정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용수 긴급지원 및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 사업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사유</th></tr>
<tr><td>2023년</td><td>3,500</td><td>1,439</td><td>41.1</td><td>보 운영정책 변경으로 지하수위가 안정화되며 지하수관련 민원이 감소해 용수 긴급지원 등의 집행 부진</td></tr>
<tr><td>2024년</td><td>500</td><td>91</td><td>18.2</td><td>계약이 연말에 체결되며 대부분이 이월되었으며, 지하수관련 민원 감소로 용수 긴급지원 등의 집행 부진</td></tr>
<tr><td>2025년 9월말</td><td>500</td><td>22</td><td>4.4</td><td>대부분의 용역, 공사가 연말에 준공 및 예산집행 예정으로 ’25.9월 기준 집행 부진</td></tr>
</table>
</td><td>1권
p.236</td></tr>
<tr><td>24. 물순환촉진지원 (일반회계, 5131-317)</td><td>▶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촉진구역 공모 및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td><td>1권
p.240</td></tr>
<tr><td>25. 상수도 연구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31)</td><td>▶‘국가수도기본계획(변경) 수립 연구’ 용역비는 2026년도 예산안에 2차년도 계약금액(39억 1,300만원)의 100%가 전액 편성되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년 7월인 점을 고려하여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td><td>1권
p.248</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연도별 배분금액을 적절히 편성할 필요

[국가수도기본계획(변경) 수립 연구 용역]

<table><tr><th>구분</th><th>1차년도</th><th>2차년도</th></tr><tr><td>계약기간</td><td>'25.7～'26.1.31</td><td>'26.2.1～'27.7.2</td></tr><tr><td>계약금액</td><td>807백만원</td><td>3,913백만원</td></tr></table></td><td></td></tr>
<tr><td></td><td>▶상수도 연구관리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하반기 계약 비중이 높아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연구비의 집행을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td><td>1권
p.253</td></tr>
<tr><td>26.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32-301)</td><td>▶내역사업 중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의 2030년 유출지하수 이용률 목표인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025년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업 지역</th><th colspan="3">기후에너지환경부</th><th colspan="3">사업시행주체</th></tr><tr><th>2025년 예산</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교부 현액</th><th>실집행액</th><th>실집행률</th></tr><tr><td colspan="2">계</td><td>419,000</td><td>340,930</td><td>100.0</td><td>340,930</td><td>96,810</td><td>28.4</td></tr><tr><td>대규모</td><td>서울시 성동구</td><td>78,07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소규모</td><td>부산시 북구</td><td>20,302</td><td>20,302</td><td>100.0</td><td>20,302</td><td>0</td><td>0</td></tr><tr><td>소규모</td><td>부산 연제구</td><td>25,226</td><td>25,226</td><td>100.0</td><td>25,226</td><td>0</td><td>0</td></tr><tr><td>대규모</td><td>광주시 동구</td><td>131,519</td><td>131,519</td><td>100.0</td><td>131,519</td><td>0</td><td>0</td></tr><tr><td>대규모</td><td>광주시 북구</td><td>58,420</td><td>58,420</td><td>100.0</td><td>58,420</td><td>0</td><td>0</td></tr><tr><td>대규모</td><td>경기도 고양시</td><td>105,463</td><td>105,463</td><td>100.0</td><td>105,463</td><td>96,810</td><td>91.8</td></tr></table></td><td>1권
p.259</td></tr>
<tr><td></td><td>▶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유출지하수 이</td><td>1권</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용시설 설계 착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단계를 고려한 성과지표 및 결과 중심의 질적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th><th>202</th><th>202</th><th>202</th><th>202</th><th>2026 목표치 산출근거</th><th>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d rowspan="3">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계 착수 (단위: 개소)</td><td>목표</td><td></td><td></td><td></td><td>5</td><td>2</td><td rowspan="3">국고보조사업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 목표 설정</td><td rowspan="3">∑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 사업 수</td><td rowspan="3">계약서 또는 결과보고 문서</td></tr>
<tr><td>실적</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p.264</td></tr>
<tr><td>27.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1)</td><td>
▶내역사업인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라(지역자율) 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교부 현액(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 (B/A)</th></tr>
<tr><td>2021년</td><td>123,696</td><td>111,193</td><td>111,193</td><td>63,472</td><td>174,665</td><td>118,180</td><td>54,171</td><td>2,314</td><td>67.7</td></tr>
<tr><td>2022년</td><td>122,165</td><td>122,164</td><td>122,164</td><td>54,171</td><td>176,335</td><td>91,402</td><td>73,626</td><td>11,307</td><td>51.8</td></tr>
<tr><td>2023년</td><td>37,621</td><td>35,408</td><td>35,408</td><td>10,220</td><td>45,628</td><td>21,678</td><td>23,031</td><td>919</td><td>47.5</td></tr>
<tr><td>2024년</td><td>46,326</td><td>46,326</td><td>46,326</td><td>23,031</td><td>69,357</td><td>38,393</td><td>27,972</td><td>2,992</td><td>55.4</td></tr>
</table>
</td><td></td></tr>
<tr><td colspan="3">《자연보전국》</td></tr>
<tr><td>2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1)</td><td>
▶내역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은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25.10월 현재 1.8%), 해당 예산 사업완료일이 모두 '26년 6월이며,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므로 '26년도 편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
</td><td>1권 p.277</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 rowspan="2"></td><td>▶25년 10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 국립공원으로 고시 예정인 금정산국립공원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관련 경비를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신규지정 국립공원 초기 5개년 예산 비교]
<table><tr><th>금정산(안)</th><th>팔공산('23)</th><th>태백산('16)</th><th>무등산('13)</th></tr><tr><td>490억원</td><td>1,106억원</td><td>504억원</td><td>550억원</td></tr></table>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td><td>1권
p.284</td></tr>
<tr><td>▶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은 26년도에 실제 공사 가능한 기간(최대 5개월)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에 대한 이월 사례 및 기본·실시설계 계약 기간 연장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행 공정률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td><td>1권
p.289</td></tr>
<tr><td>29. 국립공원공단 출연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6)</td><td>▶내내역사업인 공원관리헬기 도입사업은 이월과 유찰 등이 반복된 점, 산불 대응 등을 위한 헬기 적기 납품의 중요성, 헬기 주요부품의 수입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외자로 도입이 추진될 대형헬기의 경우 부품 수급 불가에 따른 사업집행 곤란 문제 등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td><td>1권
p.293</td></tr>
<tr><td>30.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td><td>▶ 사육곰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보호시설이 구례와 서천, 민간시설로 다양화되고, 시기별로 구출 또는 몰수될 개체수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호방법을 마련 중인 개체수가 잔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밀한 종합 보호·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 건설중인 서천 보호시설의 최종 준공일이 '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육사 등 건축 시설만을 고려하더라도 '26년 4월이 되어서야 준공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에의 곰 입식을 위한 부분 임시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 민간시설에의 자본 및 경상보조를 통해 약 130마리를 보호할 예정이나, 대상이 되는 민간시설 및 해당 시설에의 입식을 위한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여건에 대한 구체적 실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곰 매입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고, 26년 이후에도 지도·점검을 통한 적발·고발, 몰수형 확정판결 이후 실제 몰수 가능</td><td>1권
p.29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31. 국토환경 녹색복원(환경개선특별회계, 1832-301)</td><td>▶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26년도 예산 편성시의 계획보다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책임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사업 초기 2개년도에 집중하여 편성되어 있으므로, 연차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td><td>1권
p.306</td></tr>
<tr><td>32.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환경개선특별회계, 1844-313)</td><td>▶ 신규 사업인 공항주변 조류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준비 및 부처·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참석현황]
<table><tr><td></td><td>2023</td><td>2024</td><td>2025</td></tr><tr><td>회의참석현황</td><td>2회</td><td>4회</td><td>4회</td></tr></table>▶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는 사업명 설정이 필요
* 세부사업의 내용중 직접적인 AI대응 내역 포함되지 않음</td><td>1권
p.311</td></tr>
<tr><td colspan="3">[대기환경정책관]</td></tr>
<tr><td>3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td><td>▶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727억 400만원)의 내내역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편성 물량을 조정하고,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

- '조기폐차' 사업 중 실집행률이 저조한 건설기계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물량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단가와 물량을 현실화하고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내역사업 '조기폐차'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대)
<table><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2">2022</td><td colspan="2">2023</td><td colspan="2">2024</td><td colspan="2">2025.8 기준</td></tr><tr><td>편성</td><td>실집행</td><td>편성</td><td>실집행</td><td>편성</td><td>실집행</td><td>편성</td><td>실집행</td></tr><tr><td>예산기준</td><td>건설기계</td><td>-</td><td>-</td><td>9,325</td><td>7,517
(80.6%)</td><td>9,325</td><td>4,415
(47.3%)</td><td>9,325</td><td>4,073
(43.6%)</td></tr><tr><td>물량기준</td><td>건설기계</td><td>-</td><td>-</td><td>5,000</td><td>1,092
(21.8%)</td><td>5,000</td><td>1,081
(21.6%)</td><td>5,000</td><td>719
(14.4%)</td></tr></table></td><td>1권
p.317</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 ‘운행차 전동화 개조’ 사업은 사업 개시일인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실집행이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물량에 대하여는 면밀한 집행관리 통해 실적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은 실집행이 2년 연속 부진함에도 지원 물량을 기존 70대에서 232대로 231.4% 확대 편성하고 있으므로,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내역사업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4</th><th colspan="2">2025.8 기준</th><th>2026년도 예산안</th></tr>
<tr><th>편성</th><th>실집행</th><th>편성</th><th>실집행</th><th>편성</th></tr>
<tr><td>예산기준</td><td>2,900</td><td>962
(33.2%)</td><td>2,320</td><td>450
(19.3%)</td><td>2,321</td></tr>
<tr><td>물량기준</td><td>220</td><td>42
(19.1%)</td><td>70</td><td>23
(32.8%)</td><td>232</td></tr>
</table>

</td><td></td></tr>
<tr><td>34. 대기오염망 구축·운영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2)</td><td>▶내역사업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종합대책’(134억 5,300만원)은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기준 도급공사 발주 후 계약을 추진 중인 상황임.
▶2025년도 예산 공사비 30억원 및 내년도 개소를 전제로 편성한 운영비 및 개소식 예산 집행을 위하여 신속한 착공 등 관리·감독 필요</td><td>1권
p.327</td></tr>
<tr><td colspan="3">[자원순환국]</td></tr>
<tr><td>35. 자원순환기반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1431-302)</td><td>▶내역사업인 ‘폐기물감량정책추진’ 사업 중, ‘자원순환정책통합홍보’ 사업(8억5,000만원) 관련,
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사업 등 다른 세부사업에서 실시하는 홍보 콘텐츠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별도의 홍보예산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② 대표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동 사업 실적을</td><td>1권
p.335</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면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td><td></td></tr>
<tr><td>36.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05)</td><td>▶내역사업인 ‘울산시 화학적재활용(해중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15억 2,4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일정이 1년 가량 순연된 상황이며, 올해 예산 실집행률이 10월 기준 0.04%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도 연쇄적으로 이월·불용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일정의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울산시 및 울산테크노파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td><td>1권
p.340</td></tr>
<tr><td>3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체계 구축·운영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15)</td><td>▶내역사업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사업(11억 3,600만원)은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에 걸친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주요 권역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별 폐배터리 회수 및 출고 현황]

(단위 : 개, %)
<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수도권</th><th>영남권</th><th>호남권</th><th>충청권</th></tr>
<tr><td>2025년 초 재고(A)</td><td>740</td><td>381</td><td>115</td><td>106</td><td>138</td></tr>
<tr><td>회수(B)</td><td>839</td><td>256</td><td>246</td><td>180</td><td>157</td></tr>
<tr><td>출고(C)</td><td>544</td><td>334</td><td>90</td><td>73</td><td>47</td></tr>
<tr><td>- 매각</td><td>440</td><td>283</td><td>65</td><td>60</td><td>32</td></tr>
<tr><td>- 실증 제공</td><td>104</td><td>51</td><td>25</td><td>13</td><td>15</td></tr>
<tr><td>9월 말 재고 (D=A+B-C)</td><td>1,035</td><td>303</td><td>271</td><td>213</td><td>248</td></tr>
<tr><td>가능 보관용량</td><td>3,453</td><td>1,097</td><td>400</td><td>1,320</td><td>636</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규모 대비 처리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상 미래폐자원의 다양화 및 시범사업* 물량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거점수거센터의 실효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 자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폐차장의 폐배터리 보관·매각 사업을 거점수거센터가 대행(‘25.9.~‘26.6.)
② 현재 성능평가가 불가능한 차종에 대한 폐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을 연초에 조기 집행할 필요</td><td>1권
p.347</td></tr>
<tr><td></td><td>▶내역사업인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사업(172억 3,700만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및</td><td>1권
p.358</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탄소중립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① 건설 계획이 실제 수행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 9월 한국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조달청 설계 적절성 검토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연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기초 공사 기간에 동절기·우기가 포함되어 있어 날씨로 인한 공기 연장 가능성 상존
② 통합 환경정보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 환경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td><td></td></tr>
<tr><td>38.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1)</td><td>
▶내역사업인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사업(29억 7,700만원)은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6">예산</th><th rowspan="2">처리량
(톤)</th><th colspan="3">대집행비용 징수</th></tr>
<tr><th>예산액</th><th>예산현액</th><th>실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h>실집행률</th><th>징수
결정액</th><th>징수
실적</th><th>징수율</th></tr>
<tr><td>2021</td><td>6,400</td><td>13,066</td><td>7,368</td><td>2,249</td><td>3,449</td><td>56.4</td><td>35,825</td><td>10,310</td><td>20</td><td>0.2</td></tr>
<tr><td>2022</td><td>5,760</td><td>8,009</td><td>5,019</td><td>1,050</td><td>1,940</td><td>62.7</td><td>15,350</td><td>4,016</td><td>5</td><td>0.1</td></tr>
<tr><td>2023</td><td>5,760</td><td>4,810</td><td>3,670</td><td>-</td><td>1,140</td><td>76.3</td><td>44,137</td><td>4,984</td><td>-</td><td>-</td></tr>
<tr><td>2024</td><td>5,760</td><td>2,716</td><td>384</td><td>-</td><td>2,332</td><td>6.7</td><td>27</td><td>-</td><td>-</td><td>-</td></tr>
<tr><td>2025.9.</td><td>3,640</td><td>3,640</td><td>-</td><td>-</td><td>-</td><td>0.0</td><td>-</td><td>-</td><td>-</td><td>-</td></tr>
</table>
주: 2024년 대집행은 처리 중이므로 처리 완료 후 비용 결정·징수 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최근 5년간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②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에 따라 대집행비용 미납 시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이 강화된바, 이를 적절히 집행하여 대집행 비용 수납율을 제고할 필요
</td><td>1권
p.367</td></tr>
<tr><td>39.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532-322)</td><td>
▶동 사업(80억원)은 고품질 재생원료의 확보 및 이를 적용한 타이어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과제와 폐타이어 재활용 소재 적용 타이어 제조 기술개발과제로 구성됨.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R&D 투자계획]
</td><td>1권
p.37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th><th>´26</th><th>´27</th><th>´28</th><th>´29</th></tr>
<tr><td colspan="2">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td><td>34,000</td><td>8,000</td><td>11,000</td><td>9,500</td><td>5,500</td></tr>
<tr><td></td><td>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td><td>24,000</td><td>5,500</td><td>7,500</td><td>7,000</td><td>4,000</td></tr>
<tr><td></td><td>폐타이어 재활용 소재 적용 타이어 제조 기술개발</td><td>10,000</td><td>2,500</td><td>3,500</td><td>2,500</td><td>1,500</td></tr>
</table>
주: 기획보고서에 따른 국비 지원 기준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폐타이어 재활용 소재 적용 타이어 개발과제는 참여기업의 민간부담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국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① 동 과제의 기술개발로 인한 원가 절감 가능성, ② EU에 코디자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무역 리스크 해소, ③ 이미 기존 타이어 생산업체등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 ④ 동 과제는 실증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과제 완료 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
②「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례와 같이 민간부담비율 상향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적극 시행할 필요</td><td></td></tr>
<tr><td>40.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1431-301)</td><td>▶동 사업(69억 9,600만원)은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경제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사이클센터 설치 일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부산·안양의 경우 센터 설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② 운영중인 업사이클센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td><td>1권
p.380</td></tr>
<tr><td colspan="3"><환경보건국></td></tr>
<tr><td>41.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환경개선특별회계, 2310-301)</td><td>▶내역사업인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개선’ 사업 내 ‘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사업(171억 8,100만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td><td>1권
p.38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2025년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동물대체 시험시설 준공 및 실험장비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td><td></td></tr>
<tr><td>42. 화학제품 안전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 2310-304)</td><td>▶내역사업인 ‘화학제품 사후관리’사업 내 ‘시장유통 화학제품 안전성 조사’사업(31억 6,400만원)의 경우,
해외직구제품 중 부적합 제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① 화학제품 시장 모니터링단 등과 협업하여 부적합 해외직구제품의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②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 유통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td><td>1권
p.395</td></tr>
<tr><td>43.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 개발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2310-316)</td><td>▶동 사업(70억원)은 블록체인 및 AI기술 기반으로 한 공정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계</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tr>
<tr><td>합 계</td><td>30,000</td><td>7,000</td><td>6,500</td><td>6,500</td><td>5,000</td><td>5,000</td></tr>
<tr><td>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관리기술 개발 사업</td><td>30,000</td><td>7,000</td><td>6,500</td><td>6,500</td><td>5,000</td><td>5,000</td></tr>
</table>
주: 국고 기준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급전략을 수립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한편,
② 블록체인 및 AI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td><td>1권
p.402</td></tr>
<tr><td>44.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 (환경개선특별회계, 2320-301)</td><td>▶‘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지원’사업(14억 2,900만원) 및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15억 7,900만원)은,
① 국내 출장 수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h colspan="3">2025년 9월</th></tr>
<tr><th>본예산</th><th>전용액</th><th>집행액</th><th>본예산</th><th>전용액</th><th>집행액</th><th>본예산</th><th>전용액</th><th>집행액</th></tr>
<tr><td>화학물질</td><td>33</td><td>190</td><td>176</td><td>33</td><td>152</td><td>168</td><td>33</td><td>110</td><td>101</td></tr>
</table></td><td>1권
p.407</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45.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환경개선특별회계, 2320-302)</td><td>(단위: 백만원)
<table>
<tr><td>안전관리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추락사설 안전관리 강화</td><td>76</td><td>65</td><td>128</td><td>76</td><td>97</td><td>167</td><td>68</td><td>59</td><td>100</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② 두 내역사업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지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
- 두 내역사업 모두 주된 사업대상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관리 및 기술지도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이미 두 내역사업 실적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 고려</td><td></td></tr>
<tr><td colspan="3">《기후에너지정책실》</td></tr>
<tr><td colspan="3">[기후에너지정책관]</td></tr>
<tr><td rowspan="2">46. 한국환경공단 출연(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3)</td><td>▶한국환경공단이 수지차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형폐비닐 매출수입이 증가할 경우 공단의 수지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 공급 계획 물량이 당초 계획(10만톤)대로 모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입이 증가할 경우 공단의 수지차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할 필요</td><td>2권
p.7</td></tr>
<tr><td>▶한국환경공단은 분산된 사무공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소송 환급금 중 200억원을 청사 매입비로 반영하여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향후 협의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사 인근 임대 건물 등에 대한 기존 계약들은 정리하여 향후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td><td>2권
p.11</td></tr>
<tr><td>47. 에너지센서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31-305)</td><td>▶동일한 에너지총조사를 출연금 예산과 사업비로 이원화하여 편성할 경우 총 집행실적과 성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td><td>2권
p.15</td></tr>
<tr><td>48.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6-301)</td><td>▶에너지바우처가 정액지급 방식과 정보·절차 장벽 등으로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실사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복지등기 및 돌봄서비스 등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통해 신청·사용 지원과 수요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td><td>2권
p.19</td></tr>
<tr><td colspan="3">[녹색전환정책관]</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49.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7)</td><td>

▶내역사업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63억원) ’25년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10월현재 3.7%), ’26년 예산안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도내 집행완료를 위해서는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비 매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

[녹색융합클러스터 예결산 현황(국비)]

(단위: 백만원, %)

<table>
<tr><th></th><th>예산</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 [A]</th><th>집행액 [B]</th><th>이월액</th><th>불용 (예상)</th><th>집행률 [B/A]</th></tr>
<tr><td>’24</td><td>1,200</td><td>-</td><td>1,200</td><td>756</td><td>324</td><td>120</td><td>63.0%</td></tr>
<tr><td>’25 10월말</td><td>4,500</td><td>324</td><td>4,824</td><td>180</td><td>-</td><td>4,500</td><td>3.7%</td></tr>
</table>

</td><td>2권 p.26</td></tr>
<tr><td>50.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7)</td><td>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사업(81억원)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전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정밀한 정책설계와 사업관리를 할 필요

* 2026년에는 대기업에 45억원(15개사), 공기업에 30억원(10개사), 중견기업(2개사)에 6억원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

[최근 3년간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 현황(실적)]

(단위 : 개사, %, 백만원)

<table>
<tr><th></th><th></th><th>대기업</th><th>공기업</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r>
<tr><td rowspan="2">2023</td><td>기업수 (비중)</td><td>14 (56%)</td><td>9 (36%)</td><td>-</td><td>2 (8%)</td></tr>
<tr><td>금액 (비중)</td><td>3,380 (62%)</td><td>1,668 (31%)</td><td>-</td><td>400 (7%)</td></tr>
<tr><td rowspan="2">2024</td><td>기업수 (비중)</td><td>15 (56%)</td><td>12 (44%)</td><td>-</td><td>-</td></tr>
<tr><td>금액 (비중)</td><td>3,840 (63%)</td><td>2,292 (37%)</td><td>-</td><td>-</td></tr>
<tr><td rowspan="2">2025 (10월)</td><td>기업수 (비중)</td><td>21 (68%)</td><td>9 (29%)</td><td>-</td><td>1 (3%)</td></tr>
<tr><td>금액 (비중)</td><td>4,630 (70%)</td><td>1,661 (25%)</td><td>-</td><td>300 (5%)</td></tr>
</table>

[최근 3년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2023</th><th rowspan="2">2024</th><th colspan="3">2025</th></tr>
<tr><th>~10월말</th><th>11~12월 (잠정)</th><th>총발행액</th></tr>
<tr><td>발행금액</td><td>46,339억원</td><td>51,662억원</td><td>40,657억원</td><td>7,900억원</td><td>48,557억원</td></tr>
</table>

주: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준

</td><td>2권 p.3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td><td></td></tr>
<tr><td>51. 환경교육강화(환경개선특별회계, 1535-309)</td><td>▶내역사업인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사업(25.5억원)은 ’25년도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방비 매칭이 불가한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사업 시도별 집행 현황(9월말)]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시도별</th><th colspan="2">부처</th><th colspan="3">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추경(A)</th><th>집행액</th><th>교부액</th><th>집행액(B)</th><th>실집행률 (B/A, %)</th></tr>
<tr><td>합 계</td><td>2,550</td><td>2,186</td><td>1,853</td><td>437.8</td><td>17.2</td></tr>
<tr><td>부산광역시</td><td>80</td><td>80</td><td>80</td><td>21</td><td>26.3</td></tr>
<tr><td>대구광역시</td><td>170</td><td>170</td><td>170</td><td>8.7</td><td>5.1</td></tr>
<tr><td>인천광역시</td><td>150</td><td>150</td><td>150</td><td>75</td><td>50</td></tr>
<tr><td>광주광역시</td><td>130</td><td>130</td><td>130</td><td>1.7</td><td>1.3</td></tr>
<tr><td>울산광역시</td><td>200</td><td>200</td><td>200</td><td>105.1</td><td>52.6</td></tr>
<tr><td>세종특별시</td><td>150</td><td>150</td><td>150</td><td>57</td><td>38</td></tr>
<tr><td>경기도</td><td>150</td><td>150</td><td>137.7</td><td>-</td><td>-</td></tr>
<tr><td>강원특별자치도</td><td>170</td><td>170</td><td>170</td><td>13.2</td><td>7.8</td></tr>
<tr><td>충청북도</td><td>150</td><td>150</td><td>133.3</td><td>10.4</td><td>6.9</td></tr>
<tr><td>충청남도</td><td>154</td><td>154</td><td>-</td><td>-</td><td>-</td></tr>
<tr><td>전북특별자치도</td><td>150</td><td>150</td><td>150</td><td>80.5</td><td>53.7</td></tr>
<tr><td>전라남도</td><td>157</td><td>157</td><td>157</td><td>1</td><td>0.6</td></tr>
<tr><td>경상북도</td><td>75</td><td>75</td><td>75</td><td>4.9</td><td>6.5</td></tr>
<tr><td>경상남도</td><td>150</td><td>150</td><td>-</td><td>-</td><td>-</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td><td>150</td><td>150</td><td>150</td><td>59.3</td><td>39.5</td></tr>
<tr><td>유보액</td><td>364</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2권
p.37</td></tr>
<tr><td>52. 무공해차 보급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1)</td><td>▶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조 6,113억 7,000만원)에서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2026년도에 물량을 감축 편성하였으나, 감축분이 연례적 과대 편성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성 물량 재검토 필요

▶또한,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환지원금’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적정 물량 편성 여부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전환지원금은 기존 내연차를 교체·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기준)을 보조하는 것임.</td><td>2권
p.43</td></tr>
<tr><td></td><td>▶내역사업인 ‘무공해차 융자’ 사업(736억 6,000만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전기·수소 버스 도입을</td><td>2권
p.5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희망하는 운수사 등에 정책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재정융자 사업의 세부적인 보조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재정융자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td><td></td></tr>
<tr><td>53.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2)</td><td>▶내역사업인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740억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충전 인프라 사업 및 이동형 충전·배터리 구독 등 관련 분야 신사업 투자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임.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개요]
<table><tr><th>구분</th><th>무공해차 인프라펀드</th></tr><tr><td>펀드종류</td><td>정책펀드</td></tr><tr><td>운용구조</td><td>재간접펀드</td></tr><tr><td>펀드성격</td><td>신탁형 집합투자기구</td></tr><tr><td>펀드규모</td><td>‘26년도 약 1,500억원
(정부출자안 740억원)
※민간투자 비율 50% 이상</td></tr><tr><td>투자대상</td><td>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 연계한 충전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분야 신사업(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 프로젝트 등</td></tr><tr><td>투자구조</td><td>모펀드-자펀드 구조</td></tr></table>
▶정책펀드 사업 추진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자펀드 모집과 출자 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2권
p.60</td></tr>
<tr><td></td><td>▶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5,507억 5,000만원)은 2026년도에 ‘중속 충전기’ 2,000대를 신규 물량으로 편성하였으나, 별도 수요조사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수요 파악 필요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보조사업자의 이월·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전적인 목표 물량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음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운영 중단, 횡령 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실 관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td><td>2권
p.65</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관리·감독 필요</td><td></td></tr>
<tr><td>54. 무공해차 안심 보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4)</td><td>▶동 사업(20억원)은 2026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초과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제도임
-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거나 과실·배상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기존 책임보험 체계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 대응
-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 신차 출고 후 3년 이상의 보장기간, 정부 예산 20억원+전기차 제조사 부담금 40~60억원
▶보험 사업의 중복 문제 해소 및 현재 진행중인 보험 제도 설계 연구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제도 설계·보험사 공모·보험료 산정 등 후속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td><td>2권
p.71</td></tr>
<tr><td>55.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일반회계, 5203-301)</td><td>▶'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사업(56.25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단계의 충분한 기간확보와 중복지원 방지방안 마련, 성과지표 보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업준비와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

[2026년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성과지표]
<table><tr><th></th><th></th><th>'26년</th><th>'27년</th><th>'28년</th><th>'29년</th><th>'30년</th></tr><tr><td colspan="2">박사후연구원 지원 수(명)</td><td>50</td><td>50</td><td>50</td><td>50</td><td>50</td></tr><tr><td colspan="2">박사후연구원 취업률(%)</td><td>-</td><td>-</td><td>80</td><td>80</td><td>80</td></tr><tr><td colspan="2">산학프로젝트 수행건수(건)</td><td>25</td><td>25</td><td>25</td><td>25</td><td>25</td></tr><tr><td rowspan="2">만족도 (점)</td><td>박사후연구원</td><td>80</td><td>80</td><td>80</td><td>80</td><td>80</td></tr><tr><td>기업</td><td>80</td><td>80</td><td>80</td><td>80</td><td>80</td></tr></table></td><td>2권
p.75</td></tr>
<tr><td colspan="3">[수소열산업정책관]</td></tr>
<tr><td>56.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3)</td><td>▶내역사업인 '난방 전기화 사업'사업(90억원)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에서 무탄소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 편성 되었음.
▶높은 초기 설치비용 및 자부담을 고려할 때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수요처 확보 필요
- 히트펌프는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비용(100~200만원) 대비 초기 설치비(1,100만원~1,500만원)가 5~7배 이상 높고, 실외기 및 축열조 등 부대설비 설치로 인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td><td>2권
p.8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국내 주거환경과 40%에 달하는 자부담, 전기요금 누진제 및 낮은 가스요금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 설비 및 단열 성능을 고려한 수요처 발굴, 전기요금제 개편, 인센티브 제공의 보완 정책을 통해 가계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td><td></td></tr>
<tr><td>57.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39-302)</td><td>▶동 사업은 2024년 기준 자금 억원당 에너지절감량 효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절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

[2020~2024년 융자지원 사업 에너지절감량]
<table><tr><th>구분</th><th>지원금액(억원)</th><th>에너지절감량
(천toe/년)</th><th>억원당
에너지절감량(toe/억원)</th></tr><tr><td>2020년</td><td>2,828.8</td><td>227.9</td><td>80.6</td></tr><tr><td>2021년</td><td>2,445.1</td><td>228.3</td><td>93.4</td></tr><tr><td>2022년</td><td>2,539.7</td><td>209.1</td><td>82.3</td></tr><tr><td>2023년</td><td>2,618.3</td><td>197.9</td><td>75.6</td></tr><tr><td>2024년</td><td>2,920.0</td><td>219.6</td><td>75.2</td></tr><tr><td>합계</td><td>13,351.9</td><td>1,082.7</td><td>81.4</td></tr></table>자료: 「20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성과조사」, 한국에너지공단, 2024.12.</td><td>2권
p.89</td></tr>
<tr><td>58.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3-307)</td><td>▶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수소충전소의 수가 실제 구축 실적보다 과다편성되었으므로, 수소충전소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2026년도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table><tr><th>2026년도 예산안</th></tr><tr><td>○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 기존 : 300천원 × <u>300개소</u> × 4회(분기 1회 검사) = 360백만원
- 신규 : (300천원×12개소×4회) + (300천원×12개소×3회) + (300천원×12개소×2회) + (300천원×12개소×1회) = 36백만원</td></tr></table></td><td>2권
p.97</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연도별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25.10월 기준)]
(단위 : 개소)
<table>
<tr><th>연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10월</th></tr>
<tr><td>실적</td><td>119</td><td>35</td><td>39</td><td>49</td><td>16</td></tr>
<tr><td>누적</td><td>119</td><td>154</td><td>193</td><td>242</td><td>258</td></tr>
</table></td><td></td></tr>
<tr><td></td><td>▶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품질검사비 지원' 사업과 '수소충전소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지원' 사업은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정책목표의 일관성 유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td><td>2권
p.99</td></tr>
<tr><td>59.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01)</td><td>▶내역사업인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은 부지인허가 단계 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연, 설계 및 공사 착공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사업 추진계획 및 변경일정 비교]
<table>
<tr><th rowspan="2">추진일정</th><th colspan="4">건축</th></tr>
<tr><th>부지 인허가</th><th>건축기획
(사업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th><th>실시설계</th><th>공사</th></tr>
<tr><td>당초</td><td>-</td><td>'23.12~'24.3</td><td>'24.4~'24.7</td><td>'24.10~'26.3</td></tr>
<tr><td>변경</td><td>'24.1~'25.3</td><td>'24.1~'25.2</td><td>'25.3~'25.9</td><td>(시험평가동) '25.10~'26.12
(기업지원동) '25.10~'27.3</td></tr>
</table></td><td>2권
p.103</td></tr>
<tr><td></td><td>▶내역사업인 '수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율이 14%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 전환 확대방안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난 3년 동안(2022~2024년) 지원을 받은 86개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중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총 12개사(14%)에 불과하며,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21개사 중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4개사(19%)에 불과</td><td>2권
p.108</td></tr>
<tr><td>60. 수소유통기반구축</td><td>▶내역사업인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450 bar 수</td><td>2권</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02)	소튜브트레일러의 제작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도에 구매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	p.115
	▶한국가스공사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구매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수소 유통비용 인하를 통한 수소 공급가격 인하 및 수급안정이라는 동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 사업에 기투입된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보유 중인 수소튜브트레일러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2권 p.118
61.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10)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은 공동개발사업자이자 저탄소 암모니아 수요처인 남동발전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미낙찰 및 공동사업 해지 결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의 전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의 계속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2권 p.121
62.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18)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의 추진이 불투명해 보이고, 오만 살랄라 프로젝트 추진 관련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5년도 예산(16억 5,000만원)이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사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당초 추진계획 대비 변경일정]**	2권 p.129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단계</th><th>당초</th><th>변경</th></tr>
<tr><td rowspan="5">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td><td>타당성조사</td><td>’22.2월～’23.1월</td><td>-</td></tr>
<tr><td>JDA</td><td>’23.12월 (암모니아)</td><td>-</td></tr>
<tr><td>기본설계</td><td>’23.11월～’24.8월</td><td>-</td></tr>
<tr><td>FID</td><td>’24.12월</td><td>사업성 추가 확보중으로 지연중</td></tr>
<tr><td>EPC 착수</td><td>’25년</td><td>사업성 추가 확보중으로 지연중</td></tr>
<tr><td rowspan="4">오만 살랄라 프로젝트</td><td>사전기본설계</td><td>’24.10월～’25.5월</td><td>-</td></tr>
<tr><td>기본설계</td><td>’25.下</td><td>’25.下 예정</td></tr>
<tr><td>FID</td><td>’26년</td><td>’26년</td></tr>
<tr><td>EPC 착수</td><td>’27년</td><td>’27년</td></tr>
</table>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은 사업 편성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도별·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블루수소 생산 지연에 따른 청정수소 공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당초 추진계획 대비 변경일정]
<table>
<tr><th>구분</th><th>단계</th><th>당초</th><th>변경</th></tr>
<tr><td rowspan="3">블루암모니아 사업</td><td>기본설계 착수</td><td>’23년</td><td rowspan="3">사업 지연중</td></tr>
<tr><td>FID</td><td>’24년～’25년</td></tr>
<tr><td>EPC 착수</td><td>’25년～</td></tr>
</table>
</td><td></td></tr>
<tr><td>63. 수소연료전지 고도화 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69)</td><td>▶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026년 착공 후 2027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의 조성 및 기업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의 기능은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내 구축될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및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비교]</td><td>2권
p.13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센터명</th><th>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th><th>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기업실험동+장비동)</th></tr>
<tr><td>사업명</td><td>수소연료전지인증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5203-369)</td><td>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5203-353)</td></tr>
<tr><td>건축기간</td><td>(착공) 2026.4, (완공) 2027.9</td><td>(착공) 2026.7, (완공) 2027.6</td></tr>
<tr><td>구축비</td><td>총 143억원(국비 44.5억)</td><td>총 852억원(국비 549억)</td></tr>
<tr><td>업무</td><td>연료전지 및 수전해
부품·제품 검·인증 및 해외 진출 지원</td><td>대용량 연료전지 소재·부품의 검증, 인증 및 성능 평가</td></tr>
<tr><td>운영 주체</td><td>포항테크노파크</td><td>포항테크노파크</td></tr>
</table>
</td><td></td></tr>
<tr><td>64. 수소생산기지 구축(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04-310)</td><td>▶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025년도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기지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
(사업기간)</th><th>2023
(재이월)</th><th>2024
(이월)</th><th>2025
(본예산)</th><th>예산현액</th><th>실집행액
(실집행률)</th></tr>
<tr><td rowspan="4">수전해</td><td>전북 부안
('22~)</td><td>1,630</td><td>2,170</td><td>-</td><td>3,800</td><td>1,168
(30%)</td></tr>
<tr><td>강원 평창
('22~)</td><td>1,630</td><td>2,170</td><td>-</td><td>3,800</td><td>2,803
(73%)</td></tr>
<tr><td>충남 보령
('23~)</td><td>1,630</td><td>1,088</td><td>2,712</td><td>5,430</td><td>2,258
(41%)</td></tr>
<tr><td>강원 동해
('23~)</td><td>1,630</td><td>1,088</td><td>2,712</td><td>5,430</td><td>1,233
(22%)</td></tr>
<tr><td rowspan="3">탄소포집</td><td>충북 청주
('23~)</td><td>2,025</td><td>1,350</td><td>3,375</td><td>6,750</td><td>5,925
(87%)</td></tr>
<tr><td>인천
('25~)</td><td>-</td><td>-</td><td>2,010</td><td>2,010</td><td>0
(0%)</td></tr>
<tr><td>충남 당진
('25~)</td><td>-</td><td>-</td><td>2,025</td><td>2,025</td><td>0
(0%)</td></tr>
</table>
</td><td>2권
p.145</td></tr>
<tr><td>65.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5203-353)</td><td>▶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는 부지매입 및 부지·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등 건축일정의 지연이 우려되고, 장비도입 계획의 검증 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시험평가장비 구축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일정]</td><td>2권
p.15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당초</th><th>변경</th></tr>
<tr><td>부지매입</td><td>’24.12.</td><td>’25.10.~11. 예정</td></tr>
<tr><td>부지설계</td><td>’25.1~’25.6</td><td>’25.4~’25.12</td></tr>
<tr><td>건축설계</td><td>’25.9~’26.3</td><td>’25.9~’26.3</td></tr>
<tr><td>부지공사</td><td>’25.8~’27.12</td><td>’25.12~’27.11*</td></tr>
<tr><td>건축공사</td><td>’26.9~’27.12</td><td>’26.4~’27.9</td></tr>
</table>
-현재 예비타당성보고서상 장비도입계획의 상세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25.7~11)을 진행 중으로 2025년 1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을 받을 예정</td><td></td></tr>
<tr><td colspan="3">[전력산업정책관]</td></tr>
<tr><td>6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업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203-350)</td><td>▶대학원 충원률 부진(정원 600명 대비 재적 171명) 및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전년 목표의 120% 일률 산정) 등으로 출연금(연 200억원)의 성과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성과기반 출연 관리체계 마련 필요

[학생 현황]
<table>
<tr><th>구분</th><th>입학생</th><th>재적</th><th>졸업</th></tr>
<tr><td>계</td><td>234</td><td>171</td><td>51</td></tr>
</table>
[주요 성과지표]
<table>
<tr><th>지표</th><th>’24 목표/실적</th><th>’25 목표</th><th>’26 목표</th></tr>
<tr><td>기술이전(건)</td><td>4 / 6</td><td>5</td><td>6</td></tr>
<tr><td>논문피인용(회)</td><td>3 / 7.5</td><td>3.75</td><td>4.5</td></tr>
</table>
▶상반기 실집행률 저조(’25.7월 26.9%) 및 하반기 집중 집행이 반복되어 집행의 안정성·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계획액 · 집행액]
<table>
<tr><th>구분</th><th>’23</th><th>’24</th><th>’25</th></tr>
<tr><td>계획액</td><td>25,000</td><td>20,000</td><td>20,000</td></tr>
<tr><td>실집행</td><td>22,913</td><td>19,584</td><td>5,390</td></tr>
</table>
▶중장기적으로 출연은 법적으로 가능하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자립 기반 및 출연효과 점검체계는 미흡하여 성과와 연계한 단계별 관리계획 마련 필요
▶기관고유·일반·장비 구축비 등 항목별 지출의 목적 구분이 불명확해 사용 내역의 투명성·성과추적이 어려워, 항목별 성과 연계 기준 마련 필요</td><td>2권
p.18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67. 가스터빈부품제조 기업기술역량강화 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 구축기술개발사업(R&D)(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07)</td><td>

▶2024년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핵심기술 과제 2개가 중단되면서 기술개발-검증-적용 간 연계가 약화돼, 사업의 산업적 파급력·성과창출력이 저하됨

[중도 포기 과제]

<table>
<tr><th>과제명</th><th>사업기간</th><th>중단사유</th><th>정부출연금
(전→후)</th></tr>
<tr><td>Film Riding Seal 국산화</td><td>'22.4~'23.12</td><td>'24 R&D 예산 삭감</td><td>1,972 → 1,072</td></tr>
<tr><td>MW급 수소가스터빈 연소기</td><td>'22.4~'23.12</td><td>'24 R&D 예산 삭감</td><td>5,947 → 2,049</td></tr>
</table>

▶2026년에는 1개 과제만 잔존(품질평가·검증 플랫폼 개발)하여, 본래 목표였던 고온부품 국산화·공정기술 확보보다 시험평가 중심 구조로 축소됨

[연도별 예산 편성 · 집행]

<table>
<tr><th>연도</th><th>예산</th><th>집행액</th><th>감액사유</th></tr>
<tr><td>2022</td><td>4,860</td><td>4,860</td><td>-</td></tr>
<tr><td>2023</td><td>4,495</td><td>4,495</td><td>-</td></tr>
<tr><td>2024</td><td>2,644</td><td>2,644</td><td>R&D 구조조정(8,166→2,644)</td></tr>
<tr><td>2025</td><td>2,403</td><td>2,403</td><td>-</td></tr>
<tr><td>2026</td><td>1,225</td><td>-</td><td>-</td></tr>
</table>

▶사업 자체평가에서도 '미흡' 판정('25.3)으로 나타났으며, 핵심 공정기술 단절로 당초 계획한 성능검증·산업적 활용성과 달성에 차질 발생

▶성과지표가 사업화 매출 등 관리용 지표 중심이고 과제별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아, 실질적 기술진전·산업효과 평가가 어려워 지표체계 보완 필요

</td><td>2권
p.198</td></tr>
<tr><td>68. 전력산업정책개발(전력산업기반기금, 7401-302)</td><td>

▶예산 산정이 전년도 총액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며, 과제 난이도·정책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편성의 타당성이 미흡함

[최근 5년간 편성 ·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계획액</th><th>현액</th><th>집행액</th><th>집행률(A/B)</th><th>다음연도 이월</th></tr>
<tr><td>2021</td><td>385</td><td>433</td><td>313</td><td>72.3</td><td>116</td></tr>
<tr><td>2022</td><td>385</td><td>501</td><td>365</td><td>72.9</td><td>116</td></tr>
<tr><td>2023</td><td>550</td><td>666</td><td>489</td><td>73.4</td><td>165</td></tr>
<tr><td>2024</td><td>495</td><td>660</td><td>490</td><td>74.2</td><td>136</td></tr>
<tr><td>2025</td><td>495</td><td>631</td><td>283</td><td>44.8</td><td>60</td></tr>
</table>

</td><td>2권
p.206</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2026년 감액 사유로 제시된 ‘내부 직접 수행 확대’는 실제 집행 구조(대부분 외부 용역)와 불일치하여 감액의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함
▶불용·이월이 상시적으로 발생(이월액 연평균 1~1.6억원 수준)하여 집행의 연중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
▶성과지표가 정책반영·제도개선 등 실질적 정책효과를 측정하지 못해, 성과평가의 정량성과 환류기능이 미흡함</td><td></td></tr>
<tr><td>6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전출
(전력산업기반기금, 8701-803)</td><td>▶전출 규모가 매년 1조원 내외로 반복되나, 정량 산식·상한 기준이 없어 산정의 투명성이 미흡함

[전력기금 지출사업 대비 전출 비중]
<table><tr><th>연도</th><th>지출사업비(억원)</th><th>전출액(억원)</th><th>비중</th></tr><tr><td>2025</td><td>20,006</td><td>12,426</td><td>62</td></tr><tr><td>2026</td><td>25,675</td><td>9,091</td><td>35</td></tr></table>
▶전출금이 에특회계의 다른 수입원과 합산 운용되어 전출 재원의 실제 사용내역(사업별 투입 규모) 추적이 곤란함
▶전출 이후 목적 적합성을 검증할 교차공시·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해 기금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지속될 우려
▶전력기금 본래 목적(전력망·수요관리·안전·R&D 등) 대비 대규모 전출이 장기화되면 재정 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여력이 저하될 위험</td><td>2권
p.213</td></tr>
<tr><td>7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전력산업기반기금, 9730-971)</td><td>▶계획 대비 반복적 과다집행(’23 167%, ’24 134%, ’25.7 567%) 및 잦은 감액·전용으로 예산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저하

[계획 대비 집행]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계획액(A)</th><th>집행액(B)</th><th>B/A</th></tr><tr><td>2023</td><td>591,456</td><td>989,139</td><td>167.2</td></tr><tr><td>2024</td><td>585,727</td><td>787,128</td><td>134.4</td></tr><tr><td>2025.7</td><td>37,928</td><td>215,215</td><td>567.4</td></tr></table>
▶여유자금 예치 항목이 기금 내부 재정조정(타 사업 증액 재원) 기능으로 반복 활용되어 본래 기능인 ‘단기 유동성 관리’와 괴리
-농어촌전기공급·전력효율향상·차액지원 등 다수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전환 사례 다수</td><td>2권
p.22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예치 규모 산정·감액·전용에 대한 정량 기준(상한·편차)이 부재해 행정관행 의존 → 운용의 일관성·통제성 미흡
-법적 근거는 있으나(국가재정법 제63조) 내부 운용기준이 미명문화
▶감액·전용으로 인한 조기 인출 등으로 이자수익 감소 ('23 215억 → '24 177억 → '25.7월 80.6억 수준)
-예치금 변동성 확대 → 자산운용 효율성 저하

[이자수익 추이]
<table><tr><th>연도</th><th>이자수익(억원)</th><th>증감</th></tr><tr><td>2023</td><td>215</td><td>-</td></tr><tr><td>2024</td><td>177</td><td>△38</td></tr><tr><td>2025.7</td><td>80.6</td><td>△96.4</td></tr></table></td><td></td></tr>
<tr><td colspan="3">[전력망정책관]</td></tr>
<tr><td>71.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39-308)</td><td>▶예타 면제·적격성 심사가 절차적 검토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 확대(372억) 대비 실질적 타당성 검증이 미흡

[사전검증 절차 요약]
<table><tr><th>구분</th><th>절차</th><th>검증범위</th></tr><tr><td>분산에너지특화지역</td><td>예타 면제(KDI 적정성 검토 중)</td><td>경제성·대안 비교 미포함</td></tr><tr><td>MG 구축</td><td>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적격)</td><td>정량 분석(B/C·IRR) 비대상</td></tr></table>▶단가·보조율이 PV·ESS 평균치 등 사전 전제치에 의존하여 산정되어, 지역별 설치환경·운영비용의 편차 반영이 미흡

[단가 · 보조율 산정 전제치]
<table><tr><th>구분</th><th>산정 방식</th><th>전제치</th><th>확인된 한계</th></tr><tr><td>PV 설치단가</td><td>과거 유사사업 평균치 준용</td><td>약 14.32억원/MW</td><td>지역별 일사량·부지조건 미반영</td></tr><tr><td>ESS 설치단가</td><td>실증 평균단가 준용</td><td>약 5.6억원/MWh</td><td>충·방전 효율·운영전략 편차 미반영</td></tr><tr><td>보조율</td><td>유형별 고정(50~70%)</td><td>평균 이용률 14.46%, ESS 가동 264일</td><td>지역별 수익성·IRR 분석 부족</td></tr></table>▶성과지표가 시뮬레이션(평균 이용률·가동일수) 기반으로 설정돼, 실측데이터 반영이 어려워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제한

[성과지표 설정 근거]
<table><tr><th>지표</th><th>'26 목표</th><th>산출식</th><th>근거 전제치</th><th>한계</th></tr></table></td><td>2권
p.231</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분산화율 증가</td><td>5%p</td><td>사업 전후 평균 분산화율 차</td><td>PV 평균 이용률 14.46%</td><td>실측 기반 검증 어려움</td></tr>
<tr><td>분산에너지 활용량(MWh)</td><td>16,366</td><td>PV·ESS 설비용량 × 가동일수</td><td>ESS 264일, 효율 90%</td><td>시뮬레이션 중심</td></tr>
<tr><td>출력제어 완화(MWh)</td><td>98</td><td>ESS 2MWh × 출력제어시간 49h</td><td>호남권 데이터</td><td>지역별 편차 반영 미흡</td></tr>
</table>

▶민간부담(약 100억원) 관련 투자여력·수익성(IRR) 검증이 부재하고, 준공 이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td><td></td></tr>
<tr><td>72.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전력산업기반기금, 5139-301)</td><td>▶전력기금 목적과의 직접적 연계성(전력공급 안정·전력산업 기반조성)이 약하고,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목적 부합성·차별성 검증 필요

[주요 유사사업]
<table>
<tr><th>부처</th><th>사업명</th><th>내용</th></tr>
<tr><td>중기부</td><td>창업도약패키지</td><td>창업기업 성장·사업화 지원</td></tr>
<tr><td>산업부(KIAT)</td><td>산업혁신인재성장</td><td>글로벌 연구·인턴십</td></tr>
<tr><td>과기정통(IITP)</td><td>ICT 학점연계 인턴십</td><td>대학생 실무 인턴십</td></tr>
<tr><td>교육부</td><td>SCOUT·300+</td><td>대학 창업교육·창업팀 지원</td></tr>
</table>

▶2026년 245억원 편성은 총사업비(490억원)를 기준으로 단순 비율(33.3%·50%) 산정한 추정치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부 단가·산출식의 구체성 보완 필요

[2026년도 예산 산출 구성]
<table>
<tr><th>구분</th><th>산출식</th><th>26년 편성</th></tr>
<tr><td>실증클러스터 구축</td><td>29,000 × 50%</td><td>14,500</td></tr>
<tr><td>글로벌 인턴십</td><td>3,000 × 33.3%</td><td>1,000</td></tr>
<tr><td>벤처유치·공동연구</td><td>7,050 × 33.3%</td><td>2,350</td></tr>
<tr><td>창업지원 프로그램</td><td>4,950 × 33.3%</td><td>1,650</td></tr>
<tr><td>고전력반도체 실증</td><td>5,000 × 100%</td><td>5,000</td></tr>
<tr><td>합계</td><td></td><td>24,500</td></tr>
</table>

▶성과지표가 ‘참여 인원 수·공동연구 건수’ 등 정량 운영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기술성과·사업화·실증 연계 등 질적 성과 측정이 어려움
▶주관기관(한국에너지공대) 중심 구조로 예산·프로그램 운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중복지원 방지·거버넌스 명확화 필요</td><td>2권
p.24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73.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전력산업기반기금, 5203-333)</td><td>

▶보조율·경제성 산정이 단일 모델 기반으로 설정되어 타당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사후운영계획의 실효성 보완 필요

-보조율(ESS 50%, 커뮤니티솔라 80%)이 단일 대표모델(ESS 2MW/10MWh+PV 4MW) 기반 산정으로 지역별 수익성·투자여력 반영 미흡

-경제성(B/C 1.03)이 임계치 근접이나 다중 시나리오·민감도 분석 부족

[보조율 · 경제성 산정 근거]

<table>
<tr><th>항목</th><th>정부 제시</th><th>확인된 한계</th></tr>
<tr><td>보조율 산정</td><td>ESS 50%, 커뮤니티솔라 80% (ESS 2MW/10MWh + PV 4MW 단일모델 기준)</td><td>지역별 수익성·투자여력·계통조건 반영 미흡</td></tr>
<tr><td>경제성 분석</td><td>B/C 1.03 (임계치 근접)</td><td>다중 시나리오·민감도 분석 부재, 변수 변화 시 손익 급변 가능</td></tr>
</table>

-성과지표(출력제어 완화·ESS 활용률 등)가 대표지역 실측 기반이나 검증체계(측정 방식·계통조건 반영)가 부족

[성과지표 산출 근거 요약]

<table>
<tr><th>지표</th><th>2026 목표</th><th>산출 방식</th><th>확인된 한계</th></tr>
<tr><td>계통혼잡 완화</td><td>80MW</td><td>ESS 4MW × 20개소</td><td>대표 지역 기반 산식, 현장 검증체계 미흡</td></tr>
<tr><td>ESS 활용률</td><td>950.4MWh</td><td>4MWh × 264일 × 효율 90%</td><td>가동일수·효율 등 평균 전제치 적용</td></tr>
<tr><td>출력제어 완화</td><td>98MWh</td><td>ESS 2MWh × 49h</td><td>지역별 출력제어 편차 미반영</td></tr>
</table>

-사후운영계획(운영주체·운영비 부담 구조)이 원론적 수준으로 장기 운영의 지속가능성 담보 한계

[사후운영계획]

<table>
<tr><th>유형</th><th>계획(정부 제출)</th><th>확인된 한계</th></tr>
<tr><td>AI 활용 ESS</td><td>민간 운용사 운영</td><td>운영비 부담·장기 계약 구조 불명확</td></tr>
<tr><td>공유형 ESS</td><td>운용사+주민협의체 공동관리</td><td>책임·비용 분담 기준 모호</td></tr>
<tr><td>커뮤니티 솔라</td><td>지자체·주민조합 운영</td><td>수익성 저하 시 장기 운영 불안정</td></tr>
</table>

</td><td>2권
p.25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74.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5457-301)</td><td>▶유가·환율 등 외생요인에 따른 반복적 예산 변경(4~19%), 불용·반납 발생, 성과지표 유지 수준 목표 설정 등으로 예산 신뢰도·집행 안정성·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최근 4년간 예산 변경]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변경 규모</th><th>변경률</th><th>주요 사유</th></tr>
<tr><td>2021</td><td>137,299</td><td>162,567</td><td>+25,268</td><td>7.6</td><td>유가·환율 변동</td></tr>
<tr><td>2022</td><td>123,569</td><td>185,895</td><td>+62,326</td><td>19.0</td><td>유가 급등</td></tr>
<tr><td>2023</td><td>132,638</td><td>175,526</td><td>+42,888</td><td>11.2</td><td>유가·환율 상승</td></tr>
<tr><td>2024</td><td>146,016</td><td>162,882</td><td>+16,866</td><td>4.3</td><td>유가·환율 상승</td></tr>
</table>
[불용 ·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불용</th><th>반납</th><th>주요 사유</th></tr>
<tr><td>2022</td><td>-</td><td>1</td><td>정산 잔액</td></tr>
<tr><td>2023</td><td>-</td><td>3,358</td><td>전기판매수익 증가 등</td></tr>
<tr><td>2024</td><td>5,707</td><td>7,708</td><td>초과지출 반납, 공사 지연</td></tr>
</table>
▶성과지표가 전년 실적 유지 수준으로 설정(예: 신재생 발전량 '24 실적 699MWh → '26 목표 631MWh)되어 실질적 성과관리 기능 미흡
▶장기 지속 복지형 사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전 리스크 관리(유가·환율) 체계 미비, 예산·정산의 변동성 지속</td><td>2권
p.263</td></tr>
<tr><td colspan="3">[재생에너지정책관]</td></tr>
<tr><td>7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td><td>▶REMS* 고도화 사업으로 발전설비의 고장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후관리 사업 내 고장 접수, A/S 실태조사, 안전점검 등 개별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를 REMS 정보와 연계·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REMS(Renewable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량, 운영상태, 전력계통 연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출력제어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REMS 연동 현황(2025. 10. 21 기준)]
(단위: 개소)
<table>
<tr><th>연도</th><th>융복합</th><th>건물지원</th><th>지역지원</th><th>공공기관</th><th>주택지원</th><th>합계</th></tr>
</table></td><td>2권
p.26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2018</td><td>4,835</td><td>1</td><td>1</td><td>10</td><td>1</td><td>4,848</td></tr>
<tr><td>2019</td><td>8,596</td><td>1,084</td><td>7</td><td>713</td><td>42</td><td>10,442</td></tr>
<tr><td>2020</td><td>20,381</td><td>1,608</td><td>819</td><td>369</td><td>21</td><td>23,198</td></tr>
<tr><td>2021</td><td>31,121</td><td>1,146</td><td>433</td><td>4</td><td>17</td><td>32,721</td></tr>
<tr><td>2022</td><td>33,546</td><td>921</td><td>391</td><td>17</td><td>9</td><td>34,884</td></tr>
<tr><td>2023</td><td>30,517</td><td>1,106</td><td>277</td><td>36</td><td>9</td><td>31,945</td></tr>
<tr><td>2024</td><td>28,410</td><td>676</td><td>1</td><td>7</td><td>20</td><td>29,114</td></tr>
<tr><td>2025</td><td>15,212</td><td>528</td><td>0</td><td>2</td><td>0</td><td>15,742</td></tr>
<tr><td>합계</td><td>172,618</td><td>7,070</td><td>1,929</td><td>1,158</td><td>119</td><td>182,894</td></tr>
</table>
</td><td></td></tr>
<tr><td>7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td><td>▶동 사업은 최근 실집행률 저조 및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202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 집행여건을 반영하여 2026년 계획안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th></tr>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2</td><td>659,000</td><td>572,186</td><td>569,121</td><td>569,121</td><td>-</td><td>569,121</td><td>518,815</td><td>-</td><td>50,306</td><td>90.7</td></tr>
<tr><td>2023</td><td>467,300</td><td>467,300</td><td>463,170</td><td>463,170</td><td>-</td><td>463,170</td><td>438,576</td><td>-</td><td>24,594</td><td>93.9</td></tr>
<tr><td>2024</td><td>369,280</td><td>369,280</td><td>369,280</td><td>369,280</td><td>-</td><td>369,280</td><td>362,361</td><td>-</td><td>6,919</td><td>98.1</td></tr>
<tr><td>2025. 9월말</td><td>326,300</td><td>426,300</td><td>401,300</td><td>401,300</td><td>-</td><td>401,300</td><td>260,741</td><td>진행중</td><td>진행중</td><td>61.2</td></tr>
<tr><td>2026</td><td>648,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주) 현시점('25.10.13.) 기준 실집행액 230,703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2권
p.275</td></tr>
<tr><td>77.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전력기금, 5202-315)</td><td>▶동 사업은 2026년부터 정부주도형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되어 중복조사 방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나, 일부 지역에서 지방비와 민간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지방비 확보상황을 종합적으로</td><td>2권
p.28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진행한 기초조사결과를 연계 활용하여 사업 지연과 재정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td><td></td></tr>
<tr><td>78.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28)</td><td>▶내역사업인 해외상용화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의 실적과 수요가 미비함에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해외타당성조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신재생에너지 해외상용화 지원 사업 실적]
<table><tr><th>사업명</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 9</th></tr><tr><td>신재생 해외상용화 지원 사업(건)</td><td>-</td><td>-</td><td>-</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2</td><td>1</td><td>-</td><td>-</td><td>-</td></tr></table></td><td>2권 p.290</td></tr>
<tr><td>79.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29)</td><td>▶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가 국제표준과 국가간 상호인정협력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부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시험·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해외시험 인증비용과 국내 인증비용 비교 표]
<table><tr><th>대상 부품</th><th>해외 시험·인증 비용(건)</th><th>국내 전환 시 예상비용(건)</th><th>절감액 (예상치)</th></tr><tr><td>피치/요 베어링 (유럽 일반 사례)</td><td>30억 원</td><td>15억 원</td><td>15억 원</td></tr><tr><td>피치/요 베어링 (프라운호퍼 시험)</td><td>40억 원</td><td>15억 원</td><td>25억 원</td></tr></table></td><td>2권 p.294</td></tr>
<tr><td>80.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30)</td><td>▶과거 가파도 탄소제로섬 사업의 장비 고장, 주민 갈등 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예산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함에 따라 전체 사업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원화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양하며, 현행 보조율(100% 국비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비나 주민부담금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로 조정할 필요</td><td>2권 p.29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2026년도 가파도 RE100마을조성 사업 예산 산출 내역]

<table>
<tr><th>구 분</th><th>산출 내역</th></tr>
<tr><td>공급 설비</td><td>① (육상풍력 설비지원) 1기 × 9,000백만원 × 100% = 9,000백만원
② (ESS 설비지원) 1식 × 11,000백만원 × 100% = 11,000백만원</td></tr>
<tr><td>주택 설비</td><td>① (태양광 설비지원) 83가구 × 4.3백만원 × 100% = 357백만원
② (히트펌프 설비지원) 132가구 × 7.45백만원 × 100% = 983백만원</td></tr>
<tr><td>실증 운영</td><td>○ 사업설계 및 조사, 타탕성 분석 등 용역(450백만원),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사업운영비(210백만원)</td></tr>
</table>

</td><td></td></tr>
<tr><td colspan="3">[원전산업정책관]</td></tr>
<tr><td>81.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 5705-301)</td><td>

▶예타 면제 대형 R&D(총사업비 2,695억)임에도 타당성 검증·민간부담 이행·성과지표·인허가 체계 등 핵심 관리요소의 구체성 부족

▶예타 면제 구조상 기술성·경제성 검증이 외부에서 수행되지 않아, 적정성 검토(KISTEP '26.3 예정) 결과를 예산·연차계획에 연동할 관리체계 필요

▶민간부담금이 총사업비의 58%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현재는 의향서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납입·이행 담보장치(이행보증·분기별 계획 등) 미흡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별 추진구조]

(단위: 억원)

<table>
<tr><th>과제명</th><th>기술 개요</th><th>사업 기간</th><th>정부 지원</th><th>민간 부담</th><th>기대효과</th></tr>
<tr><td>PM-HIP(열등가압 성형) 설비 구축</td><td>금속분말을 고온·고압으로 성형해 SMR 압력용기 등 대형 복합부품을 단공정 제작</td><td>'26~'31</td><td>795</td><td>1,484.4</td><td>제작기간 80% 단축(11→1.5개월) / 제작비 59% 절감</td></tr>
<tr><td>전자빔(EBW) 용접기술 개발</td><td>진공 전자빔을 활용해 두께 250mm 이상 소재를 one-pass 용접</td><td>'26~'31</td><td>184</td><td>61.25</td><td>용접기간 50% 단축 / 제작비 96% 절감</td></tr>
<tr><td>적층제조 기반 제작공정 실증</td><td>금속 3D 프린팅으로 밸브·노즐 등 복잡부품 제작</td><td>'26~'31</td><td>150</td><td>150</td><td>제작기간 25% 단축 / 제작비 30% 절감</td></tr>
</table>

</td><td>2권 p.306</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합계</td><td></td><td></td><td>1,129</td><td>1,565.65</td><td></td></tr>
</table>

▶핵심 성과목표(제작공기 80% 단축·비용 60% 절감)가 해외 모형 기반 시뮬레이션 수치에 의존해 정량 검증체계가 불완전
▶ASME·KEPIC 등 국제·국내 인허가 및 code case 제정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공정 표준화·검증·인증 연계가 불명확</td><td></td></tr>
<tr><td>82.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5451-301)</td><td>▶장기이월·재이월(최근 5년 누적 3천억원↑) 및 허위결산·임의사용 반복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미흡

[최근 5년간 이월 · 재이월 규모]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합계</th></tr>
<tr><td>소득증대사업 이월</td><td>24,462</td><td>20,880</td><td>29,366</td><td>36,469</td><td>29,451</td><td>140,628</td></tr>
<tr><td>공공·사회복지사업 이월</td><td>29,289</td><td>25,438</td><td>20,657</td><td>17,090</td><td>42,873</td><td>135,347</td></tr>
<tr><td>(기타 항목 생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보조금 취득 자산(부동산) 관리 부적정(부기등기·감정평가 누락, 자산대장 관리 미흡 등) 지속

[최근 3년 적발 사례]
(단위: 건, 억원)
<table>
<tr><th>항목</th><th>건수</th><th>환수·감액 규모</th></tr>
<tr><td>허위결산·임의사용</td><td>20</td><td>63.7</td></tr>
<tr><td>미승인 토지매각·관리 부적정</td><td>8</td><td>7.4</td></tr>
<tr><td>2년 초과 이월금 미회수</td><td>261</td><td>31.4</td></tr>
</table>

▶성과지표가 정성 위주(주민인식 점수·소통활동 등)로 구성돼 실질적 성과관리 기능 미흡
-’23년 주민인식 72.8점 → ’26년 목표 73.2점(0.4점↑) 수준
-산출근거도 3개년 평균 기반의 기계적 산정
▶제도개선(부기등기 의무화·직접수행 확대 등)에도 불구, 지자체 인력부족·관리소홀로 위반행위 반복</td><td>2권
p.315</td></tr>
<tr><td>83.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5451-302)</td><td>▶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46.1%에 불과해 이월·미집행이 반복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저하

[최근 3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편성액</th><th>이월액</th><th>실집행액</th><th>실집행률</th></tr>
<tr><td>2022</td><td>58,849</td><td>34,434</td><td>24,415</td><td>41.5</td></tr>
<tr><td>2023</td><td>103,327</td><td>52,820</td><td>50,507</td><td>48.9</td></tr>
<tr><td>2024</td><td>94,611</td><td>49,353</td><td>45,258</td><td>47.8</td></tr>
</table></td><td>2권
p.325</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지역별 사업여건과 무관한 일률적 감액·배분(준공발전소 약 40%, 신규신청 약 30%)으로 재정 효율성·형평성 저하

[준공발전소 요구 · 반영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액	반영액	반영비율
87개소	104,602	42,411	40.5

▶착공지연·보상협의 난항·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 장애가 상시화

[주요 집행지연 유형]

유형	세부 내용 예시
설계 지연	인증기관 부족, 심의 지연
토지보상 지연	보상 협의 번복, 사유지 사용 미승낙
공사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부지 재선정
주민 민원	이주대책단지 협의 난항 등

▶성과지표가 주민인식·소통활동 등 정성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효과 측정·성과관리 기능 미흡

-주민인식 점수 '23년 72.8점 → '26년 73.2점(0.4점↑)

-산출식도 과거 평균 기반의 기계적 산정

</td><td></td></tr>
<tr><td>84. 원전안전운영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09)</td><td>

▶종료연차('26) 진입에도 주요 품목(POSRV·HJTC·연소도측정설비 등)의 실증·상용화가 대부분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성과 가시화 미흡

[주요 품목의 개발 · 실증 단계]

품목	개발 단계	실증·적용 계획
POSRV	시제품	'28년 신한울3·4 공급 예정(계획 수준)
HJTC	시제품	KEPIC 인증 추진 외 일정 미제시
연소도측정설비	연구개발 중	적용 시점·절차 미제시
5M급 복합소재	시제품	'27년 공급 추진(계약·적용 미확정)

▶집행관리 취약으로 참여기관 부정집행 발생('25) → 과제 재협약·기관 교체 등으로 일정 지연, 집행률(42.9%) 저조

-RCMS에 의한 사후 적발에 그쳐 전담기관 모니터링 기능의 실효성 한계

</td><td>2권
p.334</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성과지표가 단일 매출지표(12.5억) 중심으로 형식화되어 기술개발의 진전·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24년 실적(15억)보다 낮게 목표 설정 → 도전성·정합성 부족
▶정책 연계성·후속 활용계획이 원론 수준에 머물러, 원전 계속운전·SMR 정책과의 실질적 연결성 미약
-"KEPIC 인증 후 납품 가능" 외 구체적 적용 로드맵 부재</td><td></td></tr>
<tr><td>85.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44)</td><td>▶예타 경제성 미흡(B/C 0.64·NPV △1,658억)에도 예산 유지·증액
-사업 지속 근거가 '정책적 필요성' 중심으로, 경제성 보완체계 부재

[예타 경제성 요약]
(단위: 억원)
<table><tr><th>구분</th><th>비용(PV)</th><th>편익(PV)</th><th>B/C</th><th>NPV</th></tr><tr><td>대안 시나리오2</td><td>4,582.7</td><td>2,924.9</td><td>0.64</td><td>△1,657.8</td></tr></table>
▶성과지표가 단일 매출지표(12.5억) 중심으로 형식화되어 실질적 성과관리 기능 미흡
-최근 실적('24년 15.2억) 대비 낮은 목표 설정
▶현장 실증·국제인증(ISO·ASME·KEPIC) 등 주요 성과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현장 적용성과·국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관리 보완 필요
-Mock-up 기반 실증 예정이나 가시적 적용성과·인증 실적 부재</td><td>2권
p.345</td></tr>
<tr><td>86.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R&D) (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58)</td><td>▶실증·인허가 연계 로드맵이 기획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 전망의 불확실성 존재
-신한울 실증·EUR 대응 언급은 있으나, 단계별 인허가·시험설비 구축 일정 미제시

[실증 · 인허가 로드맵 요약]
<table><tr><th>구분</th><th>'25~'26</th><th>'27~'29</th><th>'30~'31</th><th>'32~ 이후</th></tr><tr><td>기술개발·평가</td><td>개념설계, 기초안전성 평가</td><td>노심·계통 안전성 평가, 제어·감시 알고리즘 고도화</td><td>인허가 신청 준비</td><td>실증 운영(신한울) 확대 적용</td></tr></table>
▶예산 증액(102.9%)의 정합성·성과연동성 부족
-"본격 연구 착수" 설명 외 증액항목별 성과목표·검증지표 부재</td><td>2권
p.358</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집행률 관리가 RCMS 기반 회계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기술진척과의 연계가 제한적
-집행=교부 방식으로 실집행·성과 연계성이 낮아 지표 신뢰도 한계
▶탄력운전 기술의 정책 필요성은 크나, 실증·적용·인허가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사업 실효성 보완 필요</td><td></td></tr>
<tr><td>87.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사업(R&D)
(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62)</td><td>▶예산 산출근거가 단가·투입 기준 없이 ‘단순 배분식(2과제 × 666.7백만 × 9/12)’ 수준에 머물러 구체성 보완 필요
[2026년도 예산 산출근거 제시 현황 비교]
(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주요 내용</th><th>비고</th></tr>
<tr><td>정부안</td><td>10.0</td><td>2과제 × 666.7백만 × 9/12</td><td>단가·세부내역 없음</td></tr>
<tr><td>기후부 보완자료</td><td>31.5</td><td>선박예약 5.5 / 시험비 13.5 / 현물인건비 10 등</td><td>총액 배분표 수준</td></tr>
</table>
▶인허가 대응 로드맵이 연차별 개요 중심으로 구성돼 세부 검증항목·협의 절차 반영이 제한적
▶성과지표가 ‘사업화매출액’ 단일 지표로 설정되어 기술검증형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ATF·LEU^{+} 등 유사 핵연료 사업과의 연계·중복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td><td>2권
p.364</td></tr>
<tr><td>88.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13)</td><td>▶회수·리스크 관리가 전담기관 모니터링 중심의 간접관리 구조에 머물러 실효적 관리체계 보완 필요
▶성과지표가 ‘수혜기업 수’ 단일 지표로 구성되어 자금지원에 따른 매출·고용·투자 등 실질성과 반영 미흡
▶기업 수요조사(2.8조원) 대비 예산 반영률(약 50%)이 낮고 조정 사유가 정성적 판단에 그쳐 편성의 투명성 제고 필요
▶시설자금의 기성검사·분할지급 구조로 연말 집중집행·이월 위험이 상존하여 집행 안정성 확보 필요
[예산 반영률 및 수요 대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table>
<tr><th>연도</th><th>기업 수요</th><th>정부 반영액</th><th>반영률</th></tr>
<tr><td>2024</td><td>2,217</td><td>1,000</td><td>약 45</td></tr>
</table></td><td>2권
p.372</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2025</td><td>2,852</td><td>1,500</td><td>약 53</td></tr>
<tr><td>2026(안)</td><td>2,852('25 기준)</td><td>1,500</td><td>약 50</td></tr>
</table>
</td><td></td></tr>
<tr><td>89.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30)</td><td>
▶예산 산출식이 시설·장비비 요율 적용 중심으로 제시돼, 공정별·장비 도입 기반의 세부 산출근거가 미흡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 지표(해외시장 개척기업 수)로 설정돼, 실증·검증 중심 내역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Mock-up(비방사선) → Hot-Test(방사선환경) 전환 로드맵이 부재해 장비별 실증 시기·우선순위 불명확
[단계별 실증 구조 요약]
<table>
<tr><th>구분</th><th>Cold-Test(초기 성능검증)</th><th>Hot-Test(방사선환경 실증)</th></tr>
<tr><td>실증 환경</td><td>일반환경(Mock-up)</td><td>방사선환경(Hot-Test)</td></tr>
<tr><td>주요 목적</td><td>절단·로봇 등 기초 성능검증</td><td>방사선환경에서 작동신뢰성 확보</td></tr>
<tr><td>적용 장비</td><td>1단계 개발장비</td><td>동일 장비 실증 예정</td></tr>
<tr><td>주요 일정</td><td>'23~'28</td><td>실증센터 준공 '29上</td></tr>
<tr><td>비고</td><td>전환 로드맵 부재</td><td>현장 적용성과 연계성 검토 필요</td></tr>
</table>
▶지자체·연구기관 매칭 구조로 인해 연차별 편성·증빙 시점에 따라 초기사업 이월·공정 지연 리스크 상존
</td><td>2권
p.379</td></tr>
<tr><td>90.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40)</td><td>
▶예산 산출근거가 기획연구 수준(인건비·활동비 등) 제시에 그쳐, '26년 1억원 편성의 산출식·타당성 부족
[기획연구비 산출내역 요약]
<table>
<tr><th>비목</th><th>세부 항목</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
<tr><td>인건비</td><td>책임급·선임급 인건비</td><td>60,754</td><td>참여율·9개월 기준</td></tr>
<tr><td>연구활동비</td><td>국내·국외출장, 전문가 활용 등</td><td>15,000</td><td>검증 필요</td></tr>
<tr><td>연구수당</td><td>인건비의 20%</td><td>12,150</td><td>-</td></tr>
<tr><td>직접비 소계</td><td>-</td><td>87,904</td><td>-</td></tr>
<tr><td>간접비</td><td>직접비 × 13.76%</td><td>12,096</td><td>-</td></tr>
<tr><td>총합</td><td>-</td><td>100,000</td><td>산출식 부재(사후 제출)</td></tr>
</table>
▶지방비(80억)·민간부담(55억) 규모 대비 확보 여부가 불명확해, 초기 연차 이월·불용 리스크 상존
</td><td>2권
p.388</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성과지표가 ‘해외시장 개척기업 수’ 등 프로그램 지표에 머물러, 시험·검증 중심 내역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기존 시험인프라(KPS·기계연 등)와의 기능 차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수요·가동률·중복성 점검 필요</td><td></td></tr>
<tr><td>91. 처분시설 운영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631-302)</td><td>▶’26년도 증액분(13.5%) 대부분이 안전·보안·실증 관련 신규 항목에 집중됐으나, 인력·범위·기능·시점 등 산출근거가 다수 미제시
▶특수경비 인력 산정(14→18명)은 배치표·교대체계·산정식·규정 승인본이 없어 증액(10.3억원)의 타당성 검증 곤란

[특수경비 인력 산정 및 근거 제출 현황]
<table><tr><th>구분</th><th>’25년</th><th>’26년</th><th>증감</th><th>근거 제출 여부</th><th>비고</th></tr><tr><td>산정 인력</td><td>14명</td><td>18명</td><td>+4명</td><td>배치표 교대체계 산정식 없음</td><td>최소 기준 충족 주장만 제시</td></tr><tr><td>관련 규정 근거</td><td>국가보안시설 (다급)</td><td>동일</td><td>-</td><td>물리적 방호규정 승인본 미제출</td><td>인력기준 대비 구체적 근거 부재</td></tr><tr><td>감독기관 검수(KINAC)</td><td>-</td><td>-</td><td>-</td><td>검수자료 미제출</td><td>인력 적정성 검증 불가</td></tr><tr><td>특수경비 용역비 (백만원)</td><td>300</td><td>1,330</td><td>+1,030</td><td>단가·기간 산식 미제출</td><td>4.4배 증가 근거 불명확</td></tr></table>
▶실증실험동굴 운영비(0.56→6.07억원)는 ‘9개월×61.2백만원’ 총괄 단가 외 세부 산출식 부재로 범위·중복성 판단 어려움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7.59억원)은 기존 시스템과 기능 차별성·요구사항서 미제출로 예산 적정성 검증 제한</td><td>2권 p.395</td></tr>
<tr><td>92.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634-311)</td><td>▶사업 종료연도(’26)에 예산이 전년 대비 75.4% 증가(51억 → 89억원)하였으나, 4개 과제가 모두 동일 비목 중심으로 일괄 증액되어 과제별 필요성 판단이 어려움
▶인건비·수당·간접비 비중이 높아(약 62%) 직접 연구비 확대 필요성과의 연계성 설명이 제한적
▶’26년부터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로 변경되어 과제별 성과 검증이 곤란하고, 증액 편성의 타당성 판단이 어려움</td><td>2권 p.404</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기술개발 종료('26) 이후 실제 적용 시점('27~'28)과의 일정 시차 존재로 종료연도 예산 집중 편성의 정합성 추가 검토 필요</td><td></td></tr>
<tr><td colspan="3">[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 관련]</td></tr>
<tr><td>93. 기타재산이자외수입(기후대응기금, 54-547)</td><td>▶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편성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은 유상할당 경매에 따른 수입금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4,164억 2,300만원 증액된 7,65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최근 낙찰단가 하락과 낮은 낙찰률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수납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2026년 세입 계획의 현실성을 재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천톤,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획 수량</th><th rowspan="2">입찰 수량(A)</th><th rowspan="2">응찰 수량</th><th rowspan="2">낙찰 수량(B)</th><th rowspan="2">낙찰률 (B/A)</th><th rowspan="2">낙찰 단가</th><th colspan="3">수입금</th></tr><tr><th>계획(C)</th><th>실적(D)</th><th>D/C</th></tr><tr><td>2019</td><td>7,950</td><td>8,090</td><td>12,195</td><td>7,950</td><td>98.3</td><td>29,238</td><td>204,600</td><td>232,174</td><td>113.5</td></tr><tr><td>2020</td><td>8,250</td><td>9,434</td><td>9,428</td><td>8,171</td><td>86.6</td><td>30,385</td><td>215,818</td><td>248,017</td><td>114.9</td></tr><tr><td>2021</td><td>18,243</td><td>20,463</td><td>12,999</td><td>11,177</td><td>54.6</td><td>26,373</td><td>490,325</td><td>294,461</td><td>60.1</td></tr><tr><td>2022</td><td>25,800</td><td>23,236</td><td>14,585</td><td>13,642</td><td>58.7</td><td>23,243</td><td>730,584</td><td>316,714</td><td>43.4</td></tr><tr><td>2023</td><td>20,600</td><td>19,010</td><td>8,265</td><td>7,888</td><td>41.5</td><td>10,672</td><td>389,340</td><td>84,088</td><td>21.6</td></tr><tr><td>2024</td><td>20,150</td><td>20,150</td><td>21,595</td><td>17,948</td><td>89.1</td><td>10,355</td><td>289,694</td><td>185,655</td><td>64.1</td></tr><tr><td>2025.10</td><td>23,100</td><td>11,250</td><td>11,050</td><td>11,050</td><td>98.2</td><td>9,553</td><td>348,700</td><td>105,566</td><td>30.3</td></tr></table>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2권
p.410</td></tr>
<tr><td>94.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6131-601)</td><td>▶내역사업인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재원없는 이월 및 낮은 집행실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기부 사업 비교]
<table><tr><th>구분</th><th>기후에너지환경부</th><th>중소벤처기업부</th></tr><tr><td>대상</td><td>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td><td>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td></tr></table></td><td>2권
p.415</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td><td></td><td>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 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②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td></tr>
<tr><td>지원 내용</td><td>탄소무배출설비 및 연료전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td><td>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 지원)→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지원)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td></tr>
<tr><td>26년 예산안</td><td>1,100억원= 31개소(사업장)× 35.08억원</td><td>실시설계 14억원(140개소)
설비도입 167억원(125개 기초 및 공급망, 15개 고도화)
· (기초/공급망) 125개 × 200백만 × 보조율 50%
· (고도화) 15개 x 400백만 x 보조율 70%</td></tr>
<tr><td>지원 조건</td><td>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 50%,
대기업 30%</td><td>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
보조율 50~70%이내</td></tr>
<tr><td>시행 기관</td><td>한국환경공단</td><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td></tr>
<tr><td>95.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6131-600)</td><td>▶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이오매스 관련 R&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바이오탄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증절차 진행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바이오매스 직접측정체계 구축현황]

• '23 : 가속질량분석기 구매(37억원, 장비제작기간 2년, 리모델링비 4억원 불용)
• '24 : 바이오매스 시험동 설계(3억원, 대형방사성발생장치 사용허가 要)
• '25 : 바이오매스 시험동 건축(70억원, '26.7완공 예정)
• '26. 7 ~ : 가속질량분석기 설치 및 정상운영</td><td>2권
p.42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td><td></td></tr>
<tr><td>96. 온실가스 국제감축(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6131-610)</td><td>▶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유사·중복적 투자 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안정적·전략적 재정투입,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사업방식 다변화와 사업유치국 역량배양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2030 NDC 국제감축목표 3,750만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td><td>2권
p.428</td></tr>
<tr><td>97.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기후대응기금, 6131-621)</td><td>▶동 사업은 수원국과의 사업부지 확보 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원국과 사업부지 선정 등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실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내역사업명</th><th>수행기관</th><th>2025 예산액</th><th>실집행액 (10월말 기준)</th><th>실집행률 (10월말 기준)</th><th>2026년 예산안</th><th>9월말 기준 실집행 부진 사유</th><th>향후 집행전망</th></tr><tr><td>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정수장) 구축 사업</td><td>한국수자원공사</td><td>10,000</td><td>-</td><td>-</td><td>600</td><td>인니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td><td>-수원국과의 협의 완료, 시설공사 발주 및 착수금 지급으로 실집행률 50% 이상 달성 예상</td></tr><tr><td>우즈벡 지자흐주 지속가능 폐기물처리시설 구축</td><td>한국환경공단</td><td>4,500</td><td>10</td><td>0.2</td><td>500</td><td>시공업체(토공,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선정 기간 소요
※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중</td><td>-시설구축 및 공사관리 선금 지급('25.11월)으로 실집행률 80% 달성 예상</td></tr><tr><td>이집트</td><td>한국</td><td>5,00</td><td>19</td><td>0.4</td><td>100</td><td>수원국</td><td>-외교부와</td></tr></table></td><td>2권
p.441</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수행기관</th><th>2025 예산액</th><th>실집행액 (10월말 기준)</th><th>실집행률 (10월말 기준)</th><th>2026년 예산안</th><th>9월말 기준 실집행 부진 사유</th><th>향후 집행전망</th></tr>
<tr><td>카이로주 폐기물 자원화 및 기술이전 지원</td><td>환경공단</td><td>0</td><td></td><td></td><td></td><td>정부의 분담사항(기초공사, 전기 인입 등) 및 사업내용 변경 요구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td><td>협업으로 수원국과 협의 완료 *25.9.14, 수원국-한국 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간 3자 회의
-협의 내역 등 반영하여 시설구축 및 공사관리 계약 선금 지급('25.12월)으로 실집행률 75% 달성 예상</td></tr>
<tr><td>스리랑카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실증화 사업</td><td>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 (국제기구)</td><td>1,000</td><td>-</td><td>-</td><td>4,516</td><td>'25년 신규사업으로서, 약정서 체결(9.2.)을 위한 협의 기간 소요</td><td>-약정서 체결에 따른 과업 발주 및 선금 지급으로 실집행률 90% 달성 예상</td></tr>
</table>
</td><td></td></tr>
<tr><td>98.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6231-700)</td><td>▶동 사업은 녹색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집중지원하여 탄소중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사업화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기부 사업 비교표]

<table>
<tr><th>구분</th><th>기후에너지환경부</th><th>중소벤처기업부</th></tr>
</table>
</td><td>2권
p.449</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td><td>
<table>
<tr><td>사업목표</td><td>▸기후테크 혁신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지원</td><td>▸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사업화 및 실증 지원</td></tr>
<tr><td>지원분야</td><td>▸기후테크 분야
※ 명확한 타 부처 소관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ex. 모빌리티, 애그테크 등)</td><td>▸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td></tr>
<tr><td>지원규모</td><td>▸최대 7억원/년, 최대 3년</td><td>▸사업화: 2억원/년
▸실증: 6억원/년</td></tr>
<tr><td>지원기간</td><td>▸최대 3년(30개월)
※ 연차점검 후 계속 여부 결정</td><td>▸1년(8개월)</td></tr>
<tr><td>지원대상</td><td>▸중소·중견 환경기업</td><td>▸중소기업</td></tr>
<tr><td>지원비율</td><td>▸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td><td>▸75%미만</td></tr>
<tr><td>지원내용</td><td>▸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온실가스 감축 검증, 홍보 등 사업화 비용 전반</td><td>▸(사업화) 기술 사업화 비용 전반
▸(실증) 설비구축 등 실증지원</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기부 자료 취합후 편집
</td><td></td></tr>
<tr><td>99. 녹색전환보증(기후대응기금, 6232-505)</td><td>▶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의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증가로 운용배수가 법정한도(20배)를 상회하는 24.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므로, 향후 보증심사 및 리스크 관리 등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이 필요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 전망]
<table>
<tr><th>구 분</th><th>①
'24년
(예측)</th><th>②
'24년
(확정)</th><th>③
'25년
(계획)</th><th>④
'25년
(수정)</th><th>⑤
'26년
(예측)</th></tr>
<tr><td>보증잔액(A)</td><td>11,396</td><td>11,555</td><td>16,688</td><td>16,487</td><td>20,523</td></tr>
<tr><td>수입(B)</td><td>466</td><td>472</td><td>780</td><td>774</td><td>807</td></tr>
<tr><td>지출(C)</td><td>305</td><td>351</td><td>507</td><td>662</td><td>802</td></tr>
<tr><td>증감(D=B-C)</td><td>161</td><td>121</td><td>273</td><td>112</td><td>5</td></tr>
<tr><td>전년이월(E)</td><td>597</td><td>597</td><td>718</td><td>718</td><td>830</td></tr>
<tr><td>기본재산(F=D+E)</td><td>758</td><td>718</td><td>991</td><td>830</td><td>835</td></tr>
<tr><td>운용배수(A/F)</td><td>15.0</td><td>16.1</td><td>16.8</td><td>19.9</td><td>24.6</td></tr>
</table>
주) 신용보증기금 부실예측모형에 따른 전망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td><td>2권
p.453</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 검토사항</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100.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기후대응기금, 6232-600)</td><td>

▶동 사업은 전년 대비 29.7% 증액되었으나, 기존 펀드의 미투자금액과 회수재원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출자 계획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결성된 펀드의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미래환경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개, 2025.7월말 기준)

<table>
<tr><th rowspan="2">정책펀드명(계정명)</th><th rowspan="2">연도(확정예산 회계연도 기준)</th><th colspan="3">정부출자액(a)</th><th rowspan="2">민간출자액(b)</th><th rowspan="2">자펀드 결성액(a+b)</th><th rowspan="2">자펀드 결성수</th><th colspan="2">누적투자(2025)</th><th rowspan="2">미투자액(a+b)×(9-c)</th></tr>
<tr><th>예산(재정)출자액</th><th>기존펀드 회수액</th><th>소계</th><th>투자액(c)</th><th>투자업수</th></tr>
<tr><td rowspan="9">모태펀드(환경)</td><td>2017</td><td>200</td><td>-</td><td>200</td><td>220</td><td>420</td><td>1</td><td>392</td><td>13</td><td>-</td></tr>
<tr><td>2018</td><td>130</td><td>-</td><td>130</td><td>61.2</td><td>191.2</td><td>1</td><td>185</td><td>15</td><td>-</td></tr>
<tr><td>2019</td><td>280</td><td>-</td><td>280</td><td>152</td><td>432</td><td>2</td><td>382</td><td>16</td><td>-</td></tr>
<tr><td>2020</td><td>200</td><td>-</td><td>200</td><td>154</td><td>354</td><td>2</td><td>381</td><td>24</td><td>-</td></tr>
<tr><td>2021</td><td>300</td><td>-</td><td>300</td><td>338</td><td>638</td><td>2</td><td>590</td><td>22</td><td>-</td></tr>
<tr><td>2022</td><td>200</td><td>68.4</td><td>268.4</td><td>161.6</td><td>430</td><td>1</td><td>170</td><td>10</td><td>217</td></tr>
<tr><td>2023</td><td>450</td><td>50.0</td><td>500</td><td>275</td><td>775</td><td>1</td><td>284</td><td>7</td><td>413</td></tr>
<tr><td>2024</td><td>585</td><td>47.5</td><td>632.5</td><td>323.8</td><td>956.3</td><td>5</td><td>171</td><td>28</td><td>690</td></tr>
<tr><td>2025.7.</td><td>456</td><td>110.9</td><td>567</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2,801</td><td>276.8</td><td>3,077.9</td><td>1,685.6</td><td>4,196.5</td><td>15</td><td>2,555</td><td>135</td><td>1,320</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td><td>2권 p.458</td></tr>
<tr><td>101. 청정수소 활용 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기후대응기금, 6233-403)</td><td>

▶동 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향후 적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지역 수요를 고려한 신규사업 선정이 필요

[2024년 청정수소 활용 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실집행 실적]

<table>
<tr><th rowspan="3">목</th><th rowspan="3">세목</th><th rowspan="3">사업시행주체(기관명)</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8">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
<tr><th colspan="2">계획</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현액</th><th rowspan="2">집행액(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C/A)</th></tr>
<tr><th>당초</th><th>수정(A)</th><th>예산현액</th><th>집행액(C)</th></tr>
<tr><td colspan="3">수자원기반 청정수소 생산</td><td>3,264</td><td>2,431</td><td>2,431</td><td>2,431</td><td>0</td><td>2,431</td><td>2,021</td><td>2,431</td><td>2,021</td><td>410</td><td>-</td><td>83.1</td></tr>
<tr><td>320</td><td>08</td><td>수자원공사</td><td>700</td><td>700</td><td>700</td><td>700</td><td>-</td><td>700</td><td>290</td><td>700</td><td>290</td><td>410</td><td>-</td><td>41.4</td></tr>
<tr><td>330</td><td>03</td><td>밀양시</td><td>2,135</td><td>1,302</td><td>1,302</td><td>1,302</td><td>-</td><td>1,302</td><td>1,302</td><td>1,302</td><td>1,302</td><td>-</td><td>-</td><td>100.0</td></tr>
<tr><td>330</td><td>03</td><td>충주시</td><td>429</td><td>429</td><td>429</td><td>429</td><td>-</td><td>429</td><td>429</td><td>429</td><td>429</td><td>-</td><td>-</td><td>100.0</td></tr>
<tr><td colspan="3">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td><td>13,400</td><td>13,400</td><td>13,400</td><td>13,400</td><td>399</td><td>13,799</td><td>8,994</td><td>13,400</td><td>8,697</td><td>4,703</td><td></td><td>64.9</td></tr>
<tr><td>320</td><td>07</td><td>현대자동차</td><td>4,500</td><td>4,500</td><td>4,500</td><td>4,500</td><td>182</td><td>4,682</td><td>236</td><td>4,500</td><td>54</td><td>4,446</td><td>-</td><td>1.2</td></tr>
</table>

</td><td>2권 p.461</td></tr>
</table>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목	사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계획 당초	부처 계획 수정 (A)	부처 집행액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320	07	에코바이오 홀딩스	500	500	500	500	-	500	443	500	443	57	-	88.6
330	03	보령시	7,900	7,900	7,900	7,900	217	8,117	7,815	7,900	7,700	200	-	97.5
330	03	영천시	500	500	500	500	-	500	500	500	500	-	-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02. 탄소중립 그린도시(기후대응기금, 6331-302) — 2권 p.468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연례적 이월 해소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예결산: 2022~202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수 원 교부액	실집행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2년	1,600	1,600	800	800	800	-	-	50.0%
'23년	1,668	2,052	1,640	1,640	400	1,240	-	24.0%
'24년	1,400	1,400	1,400	1,400	1,238	1,401	-	88.4%
'25년 10월	14,400	14,400	10,800	10,800	0	-	-	10.0%

[탄소중립 그린도시(충주) 예결산: 2022~202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A)	예산 현액	집행액	충 주 교부액	실집행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2년	1,600	1,600	800	800	750	50	-	46.8%
'23년	1,668	2,088	1,700	1,700	670	1,080	-	40.1%
'24년	1,400	1,400	1,400	1,400	1,349	1,131	-	96.3%
'25년 10월	14,400	14,400	10,800	10,800	900	-	-	6.3%

103.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기후대응기금, 6333-301) — 2권 p.474

▶내역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사업은 친환경생활 실천제도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분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

['26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예산(안)]

(전자영수증) 220만명 × 100원(지급액) × 46회 × 70%(수급률) = 7,084백만원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220만명 × 300원(지급액) × 24회 × 35%(수급률) = 5,544백만원
(리필스테이션 이용) 220만명 × 2,000원(지급액) × 1회 × 1%(수급률) = 44백만원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다회용기 이용) 220만명 × 2,000원(지급액) × 1회 × 1%(수급률) = 44백만원 (무공해차 충전) 220만명 × 100원/km(지급액) × 25km × 30%(수급률) = 1,650백만원 (친환경제품 구매) 220만명 × 1,000원(지급액) × 10회 × 10%(수급률) = 2,200백만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220만명 × 100원/kg(지급액) × 5kg × 15%(수급률) = 165백만원 (폐휴대폰 반납) 220만명× 1,000원(지급액) × 1회 × 2%(수급률) = 44백만원 (일회용컵 반환) 220만명 × 200원(지급액) × 12회 × 15%(수급률) = 792백만원 (공유자전거 이용) 220만명 × 50원/km(지급액) × 48km × 1%(수급률) = 53백만원 (잔반제로 실천) 220만명 × 100원(지급액) × 192회 × 1%(수급률) = 422백만원 (미래세대 기후행동) 100백만원(행사 개최비) × 3회 = 300백만원 (텀블러 소상공인 지원) 참여 30원 × 15만회 = 4.5백만원 (다회용기 소상공인 지원) 참여 200원 × 3.75만회 = 7.5백만원 *수급률은 참여자 인센티브를 수급하였던 전체 인원중 한번이라도 해당 항목을 이용하였던 인원에 대한 실적치를 기반으로 도출	

1)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나. 고용노동부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기획조정실>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일반회계, 3050-301)	◦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는 APEC 정상회담(Leaders’ Meeting)과의 연계 없이 매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회의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 향상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회원 경제체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참석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대상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이행이라는 성과가 아닌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권고사항이나 추상적 선언, 상징적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형식적 모임이 될 수 있기에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 여부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 실리적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p.29
<고용정책실>		
2.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일반회계, 1060-301)	◦ 건설업 최초 입문자 또는 경력 1년 미만 인력을 대상으로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 1인이 총 60일간 훈련 전 과정에 참여할 경우 훈련장려금 108만원과 실습비 300만원 등 총 408만원을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취업지원사업의 훈련장려금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타 업종에 대한 훈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장려금 및 실습비 수준 조정 필요	p.34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비목변경할 필요	p.41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당시 일반근로자, 예	p.45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일반회계, 1231-300)	술인,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한 바 있고, 예술인 사업 참여자 수와 가사근로자 수가 최근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유형별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내역사업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은 가사근로자법 상의 정부인증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현재까지 인증기관 수와 가사근로자 수 및 인지도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으므로 사업 확산을 위하여 우수 인증기관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	p.49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특회계, 1056-317)	◦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현재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광역연합' 1개소가 유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상 책임이 불명확하고 예산 교부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 자부담율(10~30%)을 고려할 때 기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추가하여 권역당 100억원씩의 사업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	p.54
5.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고보기금, 1083-357)	◦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4년 집행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5년 역시 9월 기준 집행률이 저조하며,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 또한 감소하였는바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과 고용보험수사관 역량 제고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	p.61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6. 사회적기업 지원 (일반회계, 1037-311)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지특회계, 1037-312)	◦ 사회적기업 관련 2026년도 예산안은 2023년 발표된 기본계획과 지원 방식·평가 연계·정책 기조 등이 불일치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성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	p.65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고,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시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 민간기관, 사회적기업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p.79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수준과 지원방식은 실제 현장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금 수준 및 지원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p.83
7.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일반회계, 1043-3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026년 예산안 중 ‘청년근속 인센티브’의 경우 인센티브의 예산안 894억 2,600만원은 2025년 채용인원 48,150명의 차년도 집행분(725억 1,4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한바, 실제 청년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채용인원과 지원금 신청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	p.90
8. 청년미래플러스 (일반회계, 1051-308)	◦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과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사업이력이 짧아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나 성과평가 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통합운영 계획된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대상을 선별하는 한편, 통합 이후의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설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	p.97
9.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일반회계, 1331-300)	◦ ‘남녀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민·관 사업이 병행추진되나, 민·관 상담실 간 기능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내담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체계적인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	p.103
10. 중장년층취업지원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	p.108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일반회계, 1340-300)	으로 추진되는데, 업종별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 참여 유인을 병행하는 구조적 보완방완을 검토하는 한편, 대상자의 참여 경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효과가 제도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11. 경계성지능청년지원 (일반회계, 1343-300)	◦동 사업은 현재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직접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장기직업훈련, 고용연계형 인턴십 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중장기 재정투입계획이 수립될 필요	p.114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동 기금의 수입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일부 수입과목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 수입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	p.121
	◦동 기금의 규모 증가에도 기금 주요사업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 중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p.126
<직업능력정책국>		
13.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회계, 1131-300)	◦내역사업인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결과 양성된 인력의 동일 직종 취업률과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결과 양성된 인력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바, 양성된 인력이 장기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시 고용형태 등 자료를 함께 관리하여 성과평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	p.130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2026년 예산에 포상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집행액이 저조하므로 포상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 적정소요를 반영할 필요	p.134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노동정책실>		
14. 상생협력 확산지원 (일반회계, 2031-301)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사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기업의 컨설팅 결과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당 평균 컨설팅 지원 비용이 약 1억원으로 유사한 사업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단가 850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컨설팅 결과의 이행 여부를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임금체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p.138
15. 취약노동자지원 (일반회계, 2031-303)	◦ 2026년 신규 사업인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체 예산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 법률구조사업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7만원만 집행되는 등 노무제공자 법률서비스 관련 사업의 실적이 높지 않고, 소송 종료 후 비용을 정산함에 따라 접수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집행구조를 고려할 때 2026년 예산 2억원이 연내 전액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수요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	p.143
1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3031-305)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이 중 1억원을 전문강사 양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교육원 예산 4억 9,700만원으로 전문강사 양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원 교육사업과 신규사업이 연계되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으로 강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콘텐츠가 2026년 말에 개발이 완료되어 강사교육이 2026년 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인바, 동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p.148
17. 근로감독역량강화 (일반회계, 3032-306)	◦ 내역사업인 '근로감독제도혁신'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300명, 고용노동부 소속 813명 총 1,113명에 대한 교육비(210-14목)를 편성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 개정 여부에 맞추어 사업 추진 여부 등의 조정이 필요	p.154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18. 고용안정장려금 (고보기금, 1345-350)	◦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타 장려금 사례 및 주 4.5일제 도입 유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개소당 평균 지원 인원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 등 정부 지원 필요 기업들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설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p.159
	◦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 예산은 주 4.5일제 도입의 촉진이라는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일부 비용보전의 성격으로서 국가사무의 위탁이라는 민간위탁사업비의 비목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타 장려금 비목과 같이 ‘기타보전금(310-04)’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	p.166
19.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 2019년 이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19년 9,587억 7,700만원에서 2024년 3,472억 6,600만원으로 6년 사이에 △6,115억 1,100만원(△63.8%) 감소하고 있는 등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분의 환수율 제고 등 기금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169
20. 대지급금 지급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내역사업 ‘대지급금 지급’ 중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하반기부터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나,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안 편성이고,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3개월)를 초과하는바 추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변제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개정 필요성 및 최우선변제권 초과 지급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제금 회수방안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p.178
	◦ 내역사업 ‘채권관리 비용’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	p.182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자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법 개정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사업비용이 2026년도 정부안 대비 감소할 예정이므로 절감소요액 감액 조정 필요	
21.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내역사업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은 2025년 10월 24일 기준 집행액이 1,900만원(0.6%)에 불과한바 20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 집행이 불가능한 계획안을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	p.188
<산업안전보건본부>		
2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 스마트 감독 장비로서 드론은 사용 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과 개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 사업주의 부동의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측·분석하고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 매뉴얼이나 드론 사용, 수집 정보 활용 및 처리 관련 지침 제정,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 관련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비 필요	p.195
23.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3-351)	◦ 내내역사업 '국선대리인 선임비용'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건당 선임비용을 7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의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p.202
24.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7-350)	◦ 내역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5년 8월말 실집행액이 900만원(0.4%)에 불과한바, 2025년 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2026년도 계획안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재보험 등 업무가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p.208
2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재기금, 4151-350)	◦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장 퇴사자의 제보로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난 안전동행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과 같이 지원사업을 감독할 권한이나 수단이 없어 지원 사업장과 설비·기기 공급업체 간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p.214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 관리도 어려우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이나 시행 계기 등이 경기부양정책으로 민간 사업장에 자본을 보조하는 측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산업재해예방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 인식의 소홀함이나 정부 의존적인 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한도와 지원비율 등 사업의 시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26. 업종별 재해예방 (산재기금, 4152-350)	◦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지역별로 균형 있게 모집·채용하기 위하여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하여 숙련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직을 겸직하면서 기간제 지킴이보다 업무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례비를 받고 순찰업무를 하도록 하는 위촉지킴이가 부족한 산업재해예방 인력을 보완한다는 사업 시행의 취지나 효율성, 기간제 지킴이와의 업무량 및 임금 등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재검토 후 그 시행 여부 결정 필요	p.222
	◦ 안전보건공시제도는 기업의 공시 참여도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미공시뿐 아니라 부실공시나 오공시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와 유사하여 공공기관의 공시 업무가중과 함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시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공공기관을 기업 공시제도 대상으로 할지 여부 재검토 필요	p.234
	◦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은 기존 산업재해예방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2] 사업 시행주체들의 이행력이나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모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특화 내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질과 이행력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방비 부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사후 평가 실	p.238

사업명	세부 검토사항	검토보고(p)
	시 필요	
27. 안전보건문화정착 (산재기금, 4154-350)	◦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이라는 세부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는 국외 출장이 수차례 실시되며 공식방문하지 않은 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어,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이라는 세부사업에 맞게 안전보건정책과 관련된 교류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출장이 실시하고 조직의 운영 등 일반적인 출장은 다른 세부사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에서 집행할 필요	p.245
28. 산재예방시설건립 (산재기금, 4154-351)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는 행정절차상 오기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거나 계획하고 있고, 이미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도출되었음에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재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해당 건축물들은 사용기간이 약 9년에서 15년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 건축되었으므로 본부·교육·연구동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계획액 7,500만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고, 경북지역본부 내진보강공사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 후 시행 여부 결정 필요	p.249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사업장 및 노동자수, 산업재해 수가 수도권 다음으로 높고, 특히 위험한 조선업이 밀집되어 공공안전체험교육장 재건립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계획액의 일부만이라도 반영 필요	p.256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은 고용노동부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에 관한 것이고,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2023년에 노후 안전체험교육장(경남)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의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 실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시 규모와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	p.260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나 안전용품 지급, 안전보건관련 책자 발간 등 기존 산재예방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다. 기상청

<table>
<tr><th>검토사항
(지적사항 제목)</th><th>세부 내용</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 colspan="3"><일반회계></td></tr>
<tr><td>1.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31-301)</td><td>▶ 기상관측장비 교체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기상청 기상장비 설치 후 장애와 오류가 증가하여 국민 안전과 예보 신뢰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과 유지보수 인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보수할 필요

[최근 5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현황 및 장비 교체 비용]
(단위: 건,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년도</th><th colspan="3">장애 유형</th><th rowspan="2">장애 건수 합계</th><th rowspan="2">장비 교체 비용
(수리비용)</th></tr>
<tr><th>센서부</th><th>전원통신부</th><th>자료처리부</th></tr>
<tr><td>2021</td><td>178</td><td>121</td><td>31</td><td>330</td><td>268</td></tr>
<tr><td>2022</td><td>202</td><td>159</td><td>24</td><td>385</td><td>270</td></tr>
<tr><td>2023</td><td>333</td><td>182</td><td>26</td><td>541</td><td>301</td></tr>
<tr><td>2024</td><td>388</td><td>171</td><td>41</td><td>600</td><td>314</td></tr>
<tr><td>2025.8</td><td>205</td><td>137</td><td>19</td><td>361</td><td>72</td></tr>
</table></td><td>2권
p.490</td></tr>
<tr><td>2.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239-502)</td><td>▶슈퍼컴퓨터 리스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슈퍼컴퓨터 리스비용의 금리 인하와 상환조건 조정을 통한 리스료 절감, AI·빅데이터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슈퍼컴퓨터 호기별 구입비 및 리스비]
<table>
<tr><th>구분</th><th>1호기</th><th>2호기</th><th>3호기</th><th>4호기</th><th>5호기</th><th>6호기</th></tr>
<tr><td>구입비용
(A)</td><td>168.6억</td><td>457.7억</td><td>532.6억</td><td>645.1억</td><td>613.9억</td><td>813.7억</td></tr>
<tr><td>리스비용
(B)</td><td>212.6억</td><td>516.8억</td><td>568.9억</td><td>680.8억</td><td>647.9억</td><td>917.5억</td></tr>
<tr><td>리스이자
(B-A)</td><td>44억</td><td>59.1억</td><td>36.6억</td><td>35.7억</td><td>34억</td><td>103.8억</td></tr>
</table></td><td>2권
p.495</td></tr>
<tr><td>3. 정지궤도 기상·우주 기</td><td>▶향후 위성 개발 일정 지연에 따른 후속 영향과 손실을</td><td>2권</td></tr>
</table>

<table>
<tr><th>검토사항
(지적사항 제목)</th><th>세부 내용</th><th>보고서
페이지</th></tr>
<tr><td>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기상청)(R&D)
(3137-406)</td><td>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이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이 향후 민간 우주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성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

[천리안위성 5호 위성사업 취소소송 관련 진행 상황]
<table><tr><th>구분</th><th>일자</th><th>주요내용</th><th>비고</th></tr><tr><td>우선협상대상자 선정</td><td>2025년 4월 초</td><td>LIG넥스원이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td><td>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td></tr><tr><td>이의신청 제기</td><td>2025년 4월 14일</td><td>KAI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 제출</td><td>규정에 따라 30일 내 검토</td></tr><tr><td>이의신청 기각</td><td>2025년 5월 중순</td><td>KAI의 이의신청이 기각됨</td><td>기술원 판단</td></tr><tr><td>행정소송 제기</td><td>2025년 7월 2일</td><td>KAI가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td><td>피고: 기상청장,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td></tr><tr><td>1차 변론기일</td><td>2025년 10월 16일</td><td>행정7부 주재로 본안 심리 개시</td><td>핵심 쟁점: 평가위원 자격, 기술평가 기준</td></tr><tr><td>2차 변론기일</td><td>2026년 2월 26일</td><td></td><td>핵심 쟁점: 평가위원 자격, 기술평가 기준</td></tr></table></td><td>p.501</td></tr>
<tr><td>4.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R&D) (일반회계, 3138-310)</td><td>▶기상장비 상용화 연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기상장비 상용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한 미국, 일본 등 사례처럼 기상장비 상용화의 핵심으로 공공조달 기반의 실증-표준-민간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사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성숙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해외 및 국내 기상장비 상용화 현황 비교]
<table><tr><th>구분</th><th>해외(미국, 일본, 유럽)</th><th>대한민국</th></tr><tr><td>기술개발 체계</td><td>공공-민간 컨소시엄, 실증·운영 일체화</td><td>연구기관 중심, 실증단계 예산 단절</td></tr><tr><td>검증·인증</td><td>국가표준 인증 및 공인시험</td><td>시험·성능검증 기관 및 제도</td></tr></table></td><td>2권
p.507</td></tr>
</table>

검토사항 (지적사항 제목)	세부 내용	보고서 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미비
조달 및 시장화	정부 초기수요 보장, 민간 확산 구조	구매정책 미연계, 외산 장비 의존 70% 이상

5.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일반회계, 6132-302)

▶개도국 기상인력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맞춤형의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하여 개도국 기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시설/장비가 유지보수 관리되도록 하여 성공적인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최근 10년간 사업별 예산 및 집행 개요]

(단위 : 억원)

사업명	수원국	사업기간	예산규모	주요 내용
기상재해감시 시스템 현대화	미얀마	'17~'19	44.6	- 자동기상관측장비 40소 구축 - 자료표출시스템 구축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몽골	'17~'19	32.8	- 자동기상관측장비 32소 구축 - 자료표출시스템 구축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19~'21	21.9	위성관측자료 수신분석시스템 구축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캄보디아	'19~'22	36.4	자동기상관측장비 27소 구축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	캄보디아	'20~'23	29.7	위성관측자료 수신분석시스템 구축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라오스	'20~'23	35.5	천리안위성수신시스템 구축 태풍현업시스템 구축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필리핀	'22~'25	37.1	천리안위성수신시스템 구축 태풍현업시스템 구축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몽골	'22~'25	44.7	자동기상관측장비 20소 구축 고층관측소 1소 구축
재해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라오스	'24~'27	56.5	자동기상관측장비 27소 구축 위성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아세안 수치예보 역량 강화(라오스)	라오스	'25~'28	27.0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지역수치예보모델 구축

2권 p.513

Ⅴ. 대체토론 요지

생 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4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439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75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83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음.

주요 감액 내역은 첫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의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140억원을 감액하였음.

둘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88억원을 감액하였음.

셋째,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조기집행에 따른 20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8억원을 감액하였음.

주요 증액 내역은 첫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예산 9억 200만원, 낙동강수

계관리기금 4억 5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의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 1,964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음.

셋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증 추진 확대를 위해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예산 896억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1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변경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법 변경을 추진하는 등, 3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2. 고용노동부 소관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48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1,82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0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1,95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음.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 시행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개 사업에 총 28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음.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의 융자 승인액을 고려한

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16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음.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 및

의료장비 적기 교체 등을 위하여

429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음.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355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3. 기상청 소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노후 관측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 3,200만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10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음.

4.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견제시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 261억 4,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57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음.

Ⅶ. 심사결과

○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특이사항

없음

X. 부대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강릉 재난사태 선포와 같이 극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발생지역에 지자체고유사업(지방이양사업 포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시설 등 물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수소 혼·전소 기술이 상용화되어 청정수소발전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전후 청정수소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사업 중 현재 개발중인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임대지원을 위해 구매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국고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이후 계속해서 집행이 부진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 사용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및 히트펌프의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 감축 효과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사전 검

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가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추진한다.

○ '폐기물감량정책추진' 사업 내 '자원순환정책 통합홍보' 예산이 타 세부사업의 홍보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역사업별 홍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표의 조사대상 및 산출방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그 결과를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D 과제 조건에 따라 민간부담비율을 상향하여 민간기업의 책임감 및 적극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갱신을 기반으로, 이용률이 낮은 취약집단(생계급여 등)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방문안내·명의정리·체납해소 등을 연계 지원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기후와 주거형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여 향후 제도 변동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확정 후 입지계획·환경평가·주민수용성 확보 등 법정 절차 완료 시점에 맞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센터 구축이 국제표준(IEC 61400) 및 상호인정(MRA) 절차와 연계되지 않아 국제적 인증 활용도가 낮으므로, 국제상호인

정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민간 시험기관 참여모델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출한 뒤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제로섬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공급설비에 대한 최적 설계, 사전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통해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및 연동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민간부담금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기별 납입계획, 이행보증, 미이행 시 제재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 결과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보조율, 단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정책개발 사업에 대해 과제 산출 기준의 명확화, 정량적 성과지표 도입, 분기별 예산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전출 사업에 대해 전출 사유·규모·기간을 사전 명시하고, 전출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력기금의 용도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에 대해 전용 절차를 명문화하

고, 전용 시 기회비용 산정을 의무화하며, 분기별 운용 내역을 공개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측데이터를 병행해 ESS 설치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 SMR 제작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을 위해 인접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제작·검증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험·검사지원센터를 표준검증 중심으로 고도화해 SMR 혁신제조 부품의 국제인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단계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미달 과제는 중단·정리하고, 해체현장 적용성과 및 국제인증 획득 여부를 핵심지표로 설정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발전 보일러 타워 등 고난도 구조물 해체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등을 사업비와 분리 계상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이나 공기업 위탁 등 추진체계 변경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취수구 연장이 불가능한 양수장'의 신규 설치 대

신 2단양수 공법 도입 등 공법 변경을 추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그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대체 관정 개발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이용 안정성 확보방안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승용차가 정기검사 과정에서 안전결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차종·세대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안전성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검사 기준 개선·결과 공개 및 리콜·결함 정보의 제조사 책임 연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반영한 보조금 집행 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승용차가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사용하거나 생산과 디젤 운송시 환경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전기차 대비 보조금 단가도 높아 정책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수소승용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반에 대해 LCA(전과정 평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보조금 단가,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조금 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검토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예산의 연례적 이·불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충전기 성능개선, 안전성 강화 등 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수요기업의 융자방식 선호, 금리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의 재정융자 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연계 지연, 대출심사 적체 등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계통접속 절차 합리화, 처리기간 단축 등 집행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연구용역과 별개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1인당 사업장 감독 건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근로감독의 예방적 위하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캄보디아 해외취업사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주재관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세(3.3%) 납부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산망 개선 등을 준비한다.

○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업종 간 편중이 없도록 지원하며, 그 성과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설계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내역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시범사업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비수도권에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질적 사용촉진을 위하여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대한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및 지역의 자발적인 공제조합 설립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들이 장기간 근속을 통해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자격시험(작업·실기형 및 면접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채점기준이 있는지 살펴 보완하고, 채점기준을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지 살펴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관리·감독한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 늘어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금비율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마련한다.

○ 정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의 인원 및 임금수준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2026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이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과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관련, 해외 주요국의 근로감독관 교육기간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신규 근로감독관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과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관련, 신규 근로감독관의 현장 적응훈련(ojt) 교육과정 도중에 신규 근로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신고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사업을 개정 노동조합법 및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등 국정과제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한다.

○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상향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마련한다.

○ 신규내역사업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임에도 예산 요구시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에라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 1억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수여하는 부분은 자체 표창부상금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해당 예산을 이 세부사업이 아닌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고 '26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집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에 의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검찰 송치 또는 검찰 기소 단계가 아니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 지원 대상에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사용자단체를 명기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위해 각 단체, 보험사 등의 외부 기업까지 참여시켜 누가 더 좋은 예방효과를 내는지 검증까지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관련 포상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기상청] : 해당 사항 없음

《 별첨자료 》

2026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	-	-
		석면피해구제기금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합 계		-	-	-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26,267	-	26,26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405	-	3,405
		금강수계관리기금	23,654	-	23,654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126	-	1,126
		석면피해구제기금	-	-	-
		전력산업기반기금	523,463	△17,543	505,92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208	-	5,20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36,206	△3,000	33,20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4,946	-	104,9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1,278	-	31,278
		임금채권보장기금	11,877	△449	11,428
		근로복지진흥기금	10,965	△1,638	9,327
	합 계		778,395	△22,630	755,765

※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관련 예비심사결과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기금	57,866	-	57,866
	합 계		57,866		57,866

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1.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관리청별 주민지원 (1331-301)	76,660	76,660	82,448	87,248	4,800	○ 내역사업인 '일반지원 사업'은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비로, 당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을 복구하기 위하여 48억원 증액	
2	환경기초시설 운영 (1332-302)	179,880	179,880	156,336	161,336	5,000	○ 경기도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위해 50억원 증액	
3	수질보전활동 지원 (1333-406)	-	-	-	902	902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한 9억 200만원 증액	
4	비점오염 저감사업	6,037	6,037	4,422	14,422	5,000	○ 강원도 인제·양구 소양호 상류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확대 사업비 5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333-407)					5,000	❍ 강원도 평창 도암호 유역 등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확대 사업비 50억원 증액	
5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 (1333-410)	7,219	7,219	7,186	7,896	710	❍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용역’ 사업은 한강하구역 일대 쓰레기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강하구 쓰레기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 7억 1,000만원 증액	
6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1337-401)	20,654	20,654	15,059	19,914	2,655	❍ 내역사업 ‘친환경 양식장 미생물 공급시설 건립’ 사업 공사비 26억 5,500만원 증액	
						2,200	❍ 내역사업 홍천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설계완료 후 착공을 위한 사업비 22억원 증액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관리청별 주민지원 (1334-301)	21,507	21,507	23,047	26,047	3,000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에너지 전환·자립 마을을 조성하는 '햇빛연금'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 증액	
2	수질보전활동 지원 (1336-405)	-	-	-	405	405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한 4억 500만원 증액	

3.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환경기초시설 설치 (1338-301)	26,373	26,373	25,202	48,481	9,000	○ 무주환경기초시설 (5개조) 사업비 90억원 증액	
						10,279	○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룡농어촌마을하수도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02억 7,900만원 증액	
						4,000	○ 내역사업인 진안군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위해 40억원 증액	
2	수질보전활동 지원 (1339-403)	-	-	-	375	375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한 3억 7,500만원 증액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동복호 조류발생 대비사업 (신규)	-	-	-	895	895	○ 광주광역시 식수원인 동복호의 여름철 조류대응 및 수질 개선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8억 9,500만원 증액	
2	수질보전활동 지원 (1342-403)	-	-	-	231	231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한 2억 3,100만원 증액	

5. 석면피해구제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 해당 사항 없음

6.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 (5139-311)	-	-	22,000	8,000	△14,000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이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의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6년 동 사업 예산 140억원 감액	
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R&D) (5703-301)	314,103	314,103	335,756	334,413	△3,543	○ 내역사업인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실증 사업(35억 4,300만원)" *은 2040 탈석탄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 35억 4,300만원 전액 감액 필요 - 2025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공고가 전격 취소되었고,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가 지속될 경우 매몰비용과 함께 사업 속행에 대한 관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은 고효율 석탄화력 보일러(USC급 미분탄 및 발전용 순환유동층) 대상으로 암모니아 혼소 연소 및 발전 기술 확보와 실증, 상용화 기반 구축의 계속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11,000	○ 국내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을 위하여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예산 110억원 증액	
						2,200	❍ 내역사업인 ‘한국형 해상풍력(K-WIND) 실증사업’은 신안 지역에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K-WIND)의 실증과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비 22억 원 증액 필요 - 2030년 해상풍력 14.3GW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형 해상풍력(K-WIND)모델 실증을 통한 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3	전력효율향상 (5145-302)	104,329	371,432	120,334	149,607	19,600	❍ 국내에서도 가정용 히트펌프 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므로,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 지원 사업 예산 196억원 증액 필요	
						5,523	❍ 내역사업인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사업은 2025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8월 접수 마감)되었고,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상향(한도확대 포함)하기 위하여 예산 55억 2,300만원 증액 필요	
						4,150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개선을 위하여 고효율기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역사업인 “소상공인고효율기기” 사업 예산 41억 5,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전기설비안전 점검 (5144-303)	104,518	104,518	109,454	110,041	587	❍ 내역사업인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사업은 AI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의 원격점검 확산을 위해 5억 8,700만원 증액 필요	
5	전력산업홍보 (7401-301)	7,366	7,366	5,378	8,722	3,344	❍ 에너지 대전환 수용성 확보, 정책지지 및 동참 유도 등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확대가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등 홍보 예산 33억 4,400만원 증액 - 전기절약홍보(18억 400만원), 재생에너지홍보(10억 4,000만원), 에너지정보소통(5억원)	
6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사업지원 (5203-350)	10,000	20,000	20,000	35,000	15,000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출연금 150억원 증액 필요	
7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5203-333)	-	-	119,616	209,216	89,600	❍ 햇빛소득마을 재생e 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896억원 증액 필요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5457-301)	115,034	115,034	114,952	153,237	38,285	❍ 도서벽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부담금 382억 8,500만원 증액 필요 *26년 사업규모(단위: 백만원) :(총필요금액) 153,237 / (정부안(75%) 114,952, 한전(25%) 38,285	
9	전선로	23,072	23,072	-	53,072	30,000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가공선로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지중화 지원 (5154-301)						지중화를 위해 300억원 증액 필요	
10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5202-325)	-	-	3,000	12,640	9,640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버터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므로, 국비 100% 지원 예산 96억 4,000만원 증액	
11	철강산단 전기요금 절감형ESS 보급사업 (신규)	-	-	-	5,000	5,000	○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5.8.)에 따른 철강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 증액 필요	
1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 (5202-304)	326,300	426,300	648,000	715,007	67,007	○ 에너지분야 사이버 보완 위협에 대응하고, 전력망 안정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 국내 인버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 인버터 교체지원 사업 예산 670억 700만원 증액 필요	
13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5202-303)	156,373	168,212	202,085	398,512	100,000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 1,000억원 증액 필요	
						11,750	○ 급증하는 마을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RE100 마을 지원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내역사업인 '융복합 지원 사업' 117억 5,000만원 증액	
						50,000	○ 전 공공기관의 K-RE100 가입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예산 500억원 반영 필요	
						24,000	○ 학교의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현장이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대상 재생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사업 예산 240억원 증액 필요	
						6,400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64억원 증액 필요	
						4,277	❍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확대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비 42억 7,700만원 증액 필요	
14	AI기반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R&D)(신규)	-	-	-	12,000	12,000	❍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인버터 기술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및 R&D 기획 거버넌스 구성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 120억원 반영 필요	
15	인버터 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신규)	-	-	-	500	500	❍ 인버터 산업 고도화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반영 및 공모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5억원 증액 필요	
16	태양광 산업생태계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신규)	-	-	-	3,000	3,000	❍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 반영 필요	
17	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32,062	32,062	31,890	36,890	5,000	❍ 국내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전 수출 경쟁력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핵심 기술개발 (5703-336)						강화를 도모하고자 50억원 증액 필요	
18	현장수요대응 원전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개발 (5703-352)	8,000	8,000	7,153	9,153	2,000	○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자립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20억원 증액 필요	
19	원전탄력운전 기술개발 (5703-358)	3,500	3,500	7,100	8,100	1,000	○ 원전의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탄력운전 상용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0억원 증액 필요	
20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7403-312)	5,408	5,408	10,155	10,255	100	○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병행하여 3D프린팅 등 혁신기술로 제조된 SMR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인증지원을 위해 기획예산 1억원 증액 필요	
21	방사성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 (7403-330)	-	-	1,500	4,000	2,500	○ 원전해체 등 고방사선환경에서 로봇, 장비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억원 증액 필요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 (신규)	-	-	-	5,208	5,208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의무 시설이므로 착수년도('26년도) 사업비 52억 800만원 증액 필요 -착공지점 설정을 위한 지표조사 및 착공지점 정밀 시추조사	

8.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

(1) 수입: 해당 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기후위험 정보지원 (정보화)(신규)	-	-	-	3,846	3,846	○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등 5대 기후위험 요인에 의한 부문별 기후위험도를 평가한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 38억 4,600만원 증액 - 기후위험지도 구축·갱신(23억 7,700만원), 시스템 구축·운영(14억 6,900만원)	
2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331-301)	33,986	33,986	41,203	52,528	4,300	○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고, 2026년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규 지정·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 예산 43억원 증액	
						2,500	○ 대학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 사업 예산 25억원 반영 필요	
						2,225	○ 한파 대응 지원(1억 2,500만원),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유도(6억원), 사무용품 재사용 확대(6억원), 실천안내서 고도화(9억원) 등 탄소중립 실천 거너번스 확대를 위한 사업비 예산 22억 2,500만원 증액	
						1,200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인식 제고 및 생활실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내 환경미래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관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비 예산 12억원 반영 필요	
						900	○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9억원 증액 필요	
						200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효과 확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후관리 예산 2억원 증액 필요	
3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6332-401)	107,593	107,593	107,055	133,198	26,143	○ 국민 보호 및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하여 난방지원, 냉방지원 등 예산 261억 4,300만원 증액 필요 (난방지원 225억 6,500만원, 냉방지원 27억 8,000만원, 운영비 3억 5,000만원, 간접비 4억 4,800만원)	
4	저수지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신규)	-	-	-	200	200	○ 저수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시범도시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사업비 2억원 반영 필요	
5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	-	-	1,200	1,200	○ 국제적 흐름인 기후공시 의무화를 국내기업이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전환적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위하여 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기술개발사업 (R&D)(신규)						비 예산 12억원 반영 필요	
6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6233-403)	17,951	17,951	21,839	24,435	2,596	○ 충주댐 대수력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전해 설비비, 기초공사비 등 25억 9,600만원 증액	
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6131-623)	16,018	16,018	30,853	32,353	50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공주시 내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자원화하고 가축분뇨 추가 처리를 통한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 예산 5억원 증액	
						500	○ 이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통합바이오가스화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5억원 반영 필요	
						500	○ 축산농가가 많은 장수군의 돈분 및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예산 5억원 증액요	
8	충주댐 수열에너지 AI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신규)	-	-	-	500	500	○ 충주댐 수열에너지 AI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반영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9	국립공원탄소흡수원구축 (6133-402)	4,836	4,836	4,416	6,416	2,000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예산 20억원 증액 필요	
10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6131-622)	31,589	31,589	30,425	38,981	4,000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 이행을 위한 문경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40억원 증액 필요	
						2,919	○ 경북 의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 29억 1,900만원 증액 필요	
						1,007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도환경관리센터의 재활용품 선별라인 구축, 보관장 설치 등 재활용품 분리선별 고도화 시설 사업비 10억 700만원 증액 필요	
						630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도환경관리센터 전처리시설 사업비 6억 3,000만원 증액 필요	

(3) 부대의견: 해당 사항 없음

나. 고용노동부

1.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051-351)	4,111	4,111	6,317	9,167	2,850	❍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사기를 계기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28억 5,000만원 증액	
2	고용보험적용 부과지원 (1083-351)	37,033	37,033	34,787	34,936	149	❍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평균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의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하여 필요한 1억 4,900만원 증액	
3	고용보험적용 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083-355)	10,873	10,873	12,662	14,597	1,935	❍ 재난 발생 시 고용보험 기능 유지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역사업인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사업’에 19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1083-357)	4,285	4,285	4,167	5,117	950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신고포상금을 2025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홍보 강화와 고용보험수사관 업무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 9억 5,000만원 증액 필요	
5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7076-210)	12,369	12,369	13,152	13,178	26	❍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평균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의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하여 필요한 2,600만원 증액	
6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054-510)	39,230	39,230	38,470	64,582	25,112	❍ 국가고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내역사업인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계획액 251억 1,200만원 증액 필요 - 주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42억원 -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209억 1,200만원	
						1,000	❍ 내역사업인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개선을 위하여 10억원 증액 필요 - 일자리사업참여자 편의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 2억 5,000만원 - 통계서비스 구축: 7억 5,0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7	고용안정장려금 (1345-350)	390,894	390,894	439,394	440,444	1,050	❍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을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 증액 필요 - 산업단지 특화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고, 홍보·교육 중심 서비스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위한 산단 기업 심화 상담을 추가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8	직장어린이집 지원 (1345-351)	107,873	107,873	103,873	103,890	17	❍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비 1,700만원 증액 필요 - 2024년 공단 공무직의 평균임금 수준은 약 3,320만원으로 2023년 공공기관 평균임금(4,015만원)의 82%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 필요 (처우개선: 700만원, 명절상여금 증액: 1,000만원)	
9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원 (1153-350)	119,225	129,325	197,240	194,240	△3,000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예산 15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인 점과 사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억원 감액 필요	
10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1155-350)	57,689	61,961	58,694	61,811	3,117	❍ 폴리텍 급식비 평균 단가(기준액)가 2,340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단가 현실화와 급식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산 증액 필요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안전보건연구 개발 및 국제협력 (4155-350)	7,331	7,331	7,031	7,131	100	❍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운영 중인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 업종 확대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원 증액 필요	
2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인건비 (7084-105)	157,008	166,416	164,624	170,558	5,934	❍ 물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확대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인력 확충 필요 - 100명 증원 필요 * 재정지원 43명, 신규사업 42명, 정책사업 15명	
3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기관 운영기본경비 (7084-205)	15,503	15,503	15,378	15,919	541	❍ 업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부 가이드안 수준으로 업무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액 필요 - 명절상여금 1억 850만원, 경영평과성과급 1억 2,359만원, 가족수당 7,346만 6,000원, 복지포인트 4,324만 2,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억 5,277만 8,000원 등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4052-350)	77,937	77,937	87,651	91,551	3,900	❍ 산업단지가 밀집한 부산·경남권에 산업재해 사망자 및 유가족 위로·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산재희생자 추모 장묘공원 건립' 사업 신규 증액 필요 - 건립을 위해 38억원 증액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1억원 증액	
5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4053-351)	9,757	9,757	14,146	17,587	3,441	❍ 내역사업 '업무상재해 조사판정'은 소송건수 증가 및 감정비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므로 34억 4,100만원 증액 필요 - 34억 4,100만원 = 소송비용 소요 24억 600만원 + 감정비용 소요 24억 8,100만원 - 2026년 정부안 14억 4,6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6	산재병원지원 (4054-350)	79,654	79,654	122,788	165,705	27,400	❍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이 시급하고, 자체수익으로는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병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74억원 증액 필요	
						12,417	❍ 내역사업 '장비현대화'는 의료사고 방지, 산재환자의 조속한 진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장비 적기 교체를 위하여 124억 1,700만원 증액 필요 - 124억 1,700만원 = 의료장비 93억 8,900만원 + 재활장비 30억 2,800만원 - 2025년 9월 기준 의료장비 노후화율 52.4%,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46.7%임	
						2,100	❍ 산재근로자의 조기재활과 직업 복귀를 위해 수도권 내 외래재활센터 설치 예산 21억원 증액 필요	
						700	❍ 내역사업 '노후시설개선' 관련, 산재근로자 전문재활치료 강화를 위한 안산병원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7억원 증액 필요	
						300	❍ 서울 및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 증액 필요	
7	산재보험시설 건립 (4055-350)	7,253	7,253	3,119	3,309	190	❍ 유휴청사로 관리중인 고용노동부 (구)대구북부지청청사를 대구 소재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 합동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사 리모델링을 1년차 설계비 등 1억 9,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8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4057-350)	19,114	19,114	23,191	25,474	1,935	❍ 내역사업 '국가핵심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재해발생 시 원활한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라이선스, 서버 및 파일암호화 솔루션, L3 스위치 등 구축을 위해 19억 3,500만원 증액 필요	
						348	❍ 내역사업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는 산재 근로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3억 4,800만원 증액 필요	
9	산재보험적용부과지원 (4058-351)	32,506	32,506	30,201	30,340	139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1억 3,900만원 증액 필요	
10	근로자건강보호 (4152-353)	45,295	45,295	47,151	49,391	2,240	❍ 김포 등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포함) 신규 설치 및 트라우마 상담 수요가 많은 일부 센터에 상담인력 충원 필요 금액 22억 4,000만원 증액 필요 - 근로자건강센터: 10억 3,000만원*2개소 - 트라우마 상담인력: 6,000만원*3명	
11	산재보험운영인건비 (7084-102)	181	181	197	639	442	❍ 신속한 재심사건 처리와 산재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기간제 심사지원관 11명 채용이 필요하므로 4억 4,200만원 증액 필요 - 심사지원관 11명 채용 시 처리건수 증가로 2026년 말 기준 평균처리기간 2025년 대비 50일 단축 예상	
12	근로복지공단인건비 (7084-104)	217,951	217,951	227,223	228,423	1,200	❍ 조선해양산업 밀집지역의 산재근로자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2026년 12억원 인건비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3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7084-202)	899	899	855	902	47	❍ 기간제 심사지원관 11명 채용 관련 사무공간 확보 및 사무집기 구매를 위하여 4,700만원 증액 필요 - 공사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14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7084-204)	36,747	36,747	39,702	40,946	1,200	❍ 조선해양산업 밀집지역의 산재근로자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2026년 임차관리비, 공공요금, 이전비용, 공사비용 등 12억원 신규 증액 필요	
						44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4,400만원 증액 필요	
15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7084-206)	1,304	1,304	2,877	4,077	1,200	❍ 조선해양산업 밀집지역의 산재근로자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 2026년 12억원 신규 증액 필요	
16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7084-208)	9,168	9,168	9,244	9,264	20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필요	
17	업종별 재해예방 (4152-350)	163,152	163,152	234,829	243,549	8,720	❍ 내내역 사업인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지원)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126억원으로 회복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을 전년과 동일한 400명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87억 2,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8	안전보건문화 정착 (4154-350)	35,674	35,674	34,506	42,706	5,000	❍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대국민 산재예방 의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0억원 증액 필요	
						3,200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제고 노력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민간단체(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산재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19	산재예방시설 건립 (4154-351)	4,200	4,200	2,882	25,070	15,988	❍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화성시 서·남부권지역) 건립 추진을 위한 159억 8,800만원 증액 필요	
						6,000	❍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된 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재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비 60억원 증액 필요	
						100	❍ 경북 안동시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액 필요	
						100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2024년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1억원 증액	

3.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대지급금 지급 (3051-300)	529,346	680,180	746,517	746,148	△449	❍ 내역사업 '채권관리비용'(37억 3,800만원)은 2025년 10월 26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변제금 회수가 가능해져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관리비용 감소가 예상되는바 4억 4,900만원 감액 필요	
						80	❍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예산 폐지에 따라 사업운영비(제도운영 기타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집행 중인 상황이나, 임금체불 증가·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범위 확대 시행 등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내역사업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을 신설하고 8,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055-301)	341	341	341	3,459	1,900	❍ 체불임금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반영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므로 19억원 증액 필요	
						1,136	❍ 현재 대지급금 지급/회수 전산망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산재요양보상업무 전산망이 2026년 하반기 분리 예정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되던 유지보수비용이 임채기금에서 발생 예정이고, 2008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지급금 전산망의 신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비용 마련이 필요하므로 11억 3,600만원 증액 필요 -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유지보수비용 7억 2,100만원, 대지급금 전산망 신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비용 4억 1,500만원	
						82	❍ 노후화된 노동보험시스템은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이 불가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데이터백업장비 고도화예산 8,200만원 증액 필요	
3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7082-103)	13,818	13,818	15,514	16,603	1,089	❍ 근로복지공단 내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발표에 따라, 회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최소 전담인력 증원 예산 10억 8,900만원 증액 필요 - 일반직 9억 500만원, 별정직 1억 8,4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7082-203)	1,890	1,890	2,042	9,632	7,588	❍ 근로복지공단 내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발표에 따라, 회수전담센터 설치에 2025년 9월 2일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발표에 따라, 회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최소 청사임차비 및 운영비용 등 증액 필요 - 75억 8,800만원 증액 ※ 청사임차료 29억 7,400만원, 기관운영경비 46억 1,400만원	
						2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200만원 증액 필요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1452-306)	252,114	260,792	270,699	282,199	11,500	❍ 내역사업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115억원 증액 필요 - 동 사업은 예산 문제로 조기에 예산이 전부 소진됨에 따라 늦은 시기에 취업이 되는 경우 예산 부족으로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보조공학기기 지원 (1453-305)	19,793	19,793	19,950	22,807	2,857	❍ 장애인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기지원금 28억 5,700만원 증액 필요 - AI, 로봇, 신소재 등 첨단기술 접목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예산상 지원 단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보조공학기기 지원단가를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1457-314)	60,611	60,611	64,475	74,163	5,500	❍ 시각장애인 대상 AI 활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설계예산(5억원) 및 시각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50억원) 등 55억원 증액 필요 -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AI 활용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진출이 가능한바,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2,200	❍ 경북형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설치 예산 22억원 증액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용역 결과, IT 산업 장애인 직업훈련 거점 순위 중 신설 유형에서 경북이 1순위	
						1,788	❍ 시각장애인전용 직업훈련시설 건립은 2025년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비 17억 8,800만원 증액 필요	
						200	❍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반영을 위한 2억원 증액 필요 - 기존 직업능력개발원(6개소)의 직업훈련은 기계·전자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취미와 여가, 정서 치유까지 포괄할 수 있는 농생명 특화 직업훈련기관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459-327)	5,064	5,064	4,808	5,158	350	❍ 일반형 교육 위탁사업과 교육홍보활동은 인식개선교육의 현장 소통과 장애인 강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사업 유지를 위한 강사활동역량강화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증액 필요 - 일반형 민간위탁 교육사업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산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강사 역량 강화와 활동지원을 위한 '강사활동지원 사업' 및 교육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으로 구성	
5	장애인고용정보화 (1466-240)	4,153	4,153	4,530	10,912	6,382	❍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서비스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비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ISP 예산 등 63억 8,200만원 증액 필요 - 주요 정보시스템 장비 이중화구성: 31억 8,100만원 - 원격지 재해복구센터(DR) 구축 ISP: 3억 4,100만원 - 장애인고용정보화 서비스 관제시스템: 10억원 - IT 서비스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도입: 16억 1,000만원 - 전산실 노후 소화설비 교체 등: 2억 5,0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6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079-120)	74,526	74,526	77,926	78,427	501	❍ 근로지원인 제도의 사업물량이 2018년 1,707명에서 2026년(안) 11,500명으로 약 6.7배 확대되었으나, 공단 담당인력 증원은 10명에 그치는 상황으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인건비 5억 100만원 증액 필요 - 공단 일반직 16명 증원(6개월 분)	

5.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근로자복지지원 (3061-301)	1,558	1,558	1,607	1,807	200	❍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도입’은 국정과제 채택사업이나 예산이 정부안 미반영되어, 청년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복지카드 지원 시범 사업’으로 2027년 추진이 필요한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첫 단계로써 2026년 민간복지몰과 전산 프로그램 연계(보완) 비용 2억원 증액 필요 ※ 청년복지카드 지원 시범 사업 - 중소기업 및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과 민간복지몰 간 전산 연계를 통해 청년 1인당 복지서비스 비용(1년 30만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	
2	퇴직연금사업 운영 (3061-318)	24,001	24,001	24,801	25,826	1,00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출범 당시(2023년) 대비 2024년 이후 운영비가 크게 감액 편성되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용 10억 400만원 증액 필요	
						21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2,1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생활안정자금 (융자) (3062-306)	91,462	106,342	91,070	89,432	△1,638	❍ 내역사업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55억 9,500만원)의 2025년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이 0.6%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 예측에 따른 2025년 융자 승인액 368억 8,800만원을 기준으로 2026년도 이차보전금은 최대 9억 5,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액을 제외한 차액 16억 3,800만원 감액 필요 - 고용노동부 예측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이차보전 추천 368 8,800만원, 이차보전 예산 3,000만원(1%)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4	기금관리비(인건비) (7081-101)	9,222	9,222	9,581	18,018	8,437	❍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금을 운용하는바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인건비 84억 3,700만원 증액 필요	
5	기금관리비(기타경비) (7081-201)	1,442	1,442	1,932	3,235	1,302	❍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금운용, 지원을 위한 운영비 13억 200만원 증액 필요	
						1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공무직 처우개선 및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 100만원 증액 필요	

6.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사항 없음

Ⅲ. 부대의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35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강릉 재난사태 선포와 같이 극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발생지역에 지자체고유사업(지방이양사업 포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시설 등 물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수소 혼·전소 기술이 상용화되어 청정수소발전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전후 청정수소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사업 중 현재 개발중인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임대지원을 위해 구매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국고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이후 계속해서 집행이 부진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 사용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및

히트펌프의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 감축 효과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사전 검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가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추진한다.

○ ‘폐기물감량정책추진’ 사업 내 ‘자원순환정책 통합홍보’ 예산이 타 세부사업의 홍보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역사업별 홍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표의 조사대상 및 산출방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그 결과를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D 과제 조건에 따라 민간부담비율을 상향하여 민간기업의 책임감 및 적극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갱신을 기반으로, 이용률이 낮은 취약집단(생계급여 등)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방문안내·명의정리·체납해소 등을 연계 지원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기후와 주거형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여 향후 제도 변동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확정 후 입지계획·환경평가·주민수용성 확보 등 법정

절차 완료 시점에 맞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센터 구축이 국제표준(IEC 61400) 및 상호인정(MRA) 절차와 연계되지 않아 국제적 인증 활용도가 낮으므로, 국제상호인정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민간 시험기관 참여 모델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출한 뒤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제로섬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공급설비에 대한 최적 설계, 사전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통해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및 연동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민간부담금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기별 납입계획, 이행보증, 미이행 시 제재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 결과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보조율, 단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정책개발 사업에 대해 과제 산출 기준의 명확화, 정량적 성과지표 도입, 분기별 예산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전출 사업에 대해 전출 사유·규모·기간을 사전 명시하고, 전출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력기금의 용도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에 대해 전용 절차를 명문화하고, 전용 시 기회비용 산정을 의무화하며, 분기별 운용 내역을 공개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측데이터를 병행해 ESS 설치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실적을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 SMR 제작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을 위해 인접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제작·검증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험·검사 지원센터를 표준검증 중심으로 고도화해 SMR 혁신제조 부품의 국제인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에 대해 단계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미달 과제는 중단·정리하고, 해체현장 적용성과 및 국제인증 획득 여부를 핵심지표로 설정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발전 보일러 타워 등 고난도 구조물 해체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

전소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등을 사업비와 분리 계상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이나 공기업 위탁 등 추진체계 변경 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취수구 연장이 불가능한 양수장'의 신규 설치 대신 2단양수 공법 도입 등 공법 변경을 추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그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대체 관정 개발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이용 안정성 확보방안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승용차가 정기검사 과정에서 안전결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차종·세대 전체에 적용되는 통

합 안전성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검사 기준 개선·결과 공개 및 리콜·결함 정보의 제조사 책임 연계를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를 반영한 보조금 집행 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승용차가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사용하거나 생산과 디젤 운송시 환경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전기차 대비 보조금 단가도 높아 정책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반에 대해 LCA(전과정 평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보조금 단가,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조금 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검토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예산의 연례적 이·불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충전기 성능개선, 안전성 강화 등 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수요기업의 융자방식 선호, 금리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의 재정융자 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연계 지연, 대출심사 적체 등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계통접속 절차 합리화, 처리기간 단축 등 집행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고용노동부: 26건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연구용역과 별개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1인당 사업장 감독 건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근로감독의 예방적 위하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캄보디아 해외취업사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주재관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세(3.3%) 납부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산망 개선 등을 준비한다.

○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업종 간 편중이 없도록 지원하며, 그 성과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설계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내역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시범사업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비수도권에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질적 사용촉진을 위하여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대한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및 지역의 자발적인 공제조합 설립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들이 장기간 근속을 통해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자격시험(작업·실기형 및 면접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채점기준이 있는지 살펴

보완하고, 채점기준을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지 살펴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관리·감독한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 늘어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금 비율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마련한다.

○ 정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의 인원 및 임금수준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2026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이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과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관련, 해외 주요국의 근로감독관 교육기간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신규 근로감독관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과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관련, 신규 근로감독관의 현장 적응훈련(ojt) 교육과정 도중에 신규 근로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신고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사업을 개정 노동조합법 및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등 국정과제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한다.

○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상향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마련한다.

○ 신규내역사업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임에도 예산

요구시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에라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 1억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수여하는 부분은 자체 표창부상금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해당 예산을 이 세부사업이 아닌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고 '26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집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에 의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검찰 송치 또는 검찰 기소 단계가 아니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 지원 대상에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사용자단체를 명기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위해 각 단체, 보험사 등의 외부 기업까지 참여시켜 누가 더 좋은 예방효과를 내는지 검증까지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관련 포상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다. 기상청: 해당없음